

#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이진영 |



#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이진영

##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1판1쇄 인쇄/ 2014년 6월 4일

1판1쇄 발행/ 2014년 6월 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권태신

편집인/ 권태신

지은이/ 이진영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8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3771-0001(대표), 3771-0019(직통) / 팩스 785-0270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19

ISBN 978-89-8031-685-4  
CIP제어번호 2014017384

8,000원

\* 제작대행 : (주)FKI미디어

경제성장률 3.0%, 합계출산율 1.1%, 2013년 한국 경제의 초라한 성적표이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용 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정부나 학계 모두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특정 계층의 취업애로요인 해소가 절실하다는 점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60% 초반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고용률을 70%로 제고하자는 목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인식 하에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정책 방안이 실행되어 효과를 거두기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대 청년층, 출산·육아기 여성, 50대 이상 장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현 정부의 정책과 방안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학력, 혼

인상태의 추이 및 이들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참가율, 학력별 인구분포, 기혼율의 추이를 성·연령·출생연도별로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에 비해 좀더 세분화된 집단의 평균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취약계층별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차별화된 특징이다. 또한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학력과 혼인상태의 변화가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략적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도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취업인턴제, 스펙 초월 채용문화 확산, 장년취업인턴제 등 현행 정부 정책의 대상 설정 및 지원방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논의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당국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보고서의 저자인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의 방향 설정과 기획에 도움을 준 변양규 연구위원과 유익한 조언으로 도움을 준 익명의 검토자 두 분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강성훈 부연구위원, 그리고 자료 정리와 연구보고서의 편집에 도움을 준 유원정 연구조원, 이유진 연구조원, 이소영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분석결과와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4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 목 차

요약	9
제 I 장 서론	19
제 II 장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제고정책	27
2.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29
2.2.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방안	31
2.3.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	33
2.4. 정년연장 지원금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35
2.5. 장년취업인턴제	36
제 III 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 소개	37
3.1. 데이터 소개	39
3.2. 분석방법	40
제 IV 장 고용취약계층의 경황을 추이와 학력, 혼인상태와의 상관관계	45
4.1. 전체 경황을 추이	48
4.2. 학력별 인구구성 변화와 경황을 추이	54
4.3.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변화와 경황을 추이	78
4.4.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	96
제 V 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07
5.1. 청년층에 대한 시사점	110
5.2. 출산·육아기 여성에 대한 시사점	113
5.3. 베이비부머 세대 등 장년층에 대한 시사점	115
5.4. 결론	118
참고문헌	120
부록	123
영문초록	127

<표 목차>

<표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2014년 3월 현재) .....29

<표 2> 청년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2014년 중점 추진계획 ..31

<표 3>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 .....33

<표 4> 정년연장 지원금(2014년 1월 현재) .....35

<표 5>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2014년 1월 현재) .....35

<표 6> 장년취업인턴제(2014년 3월 현재) .....36

<표 7>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학력별 분해 .....70

<표 8>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학력별 분해 .....75

<표 9>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혼인상태별 분해 89

<표 10>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혼인상태별 분해 ..93

<표 11>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학력, 혼인상태를 이  
용한 분해 .....99

<표 12>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학력, 혼인상태를 이  
용한 분해 .....104

<표 13> 25~29세 남녀의 경황율 변화 요인분해 결과 요약 ..110

<표 14> 35~39세 남녀의 경황율 변화 요인분해 결과 요약 ..114

<표 15> 50~54세 남녀의 경황율 변화 요인분해 결과 요약 ..116

<그림 목차>

<그림 1>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추이 .....21

<그림 2> 생애주기에 따른 출생연도별 남성경제활동참가율 ..48

<그림 3> 생애주기에 따른 출생연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0

<그림 4> 학력별 남성 인구분포 .....56

<그림 5> 학력별 여성 인구분포 .....57

〈그림 6〉 학력별 남성경제활동참가율 .....	60
〈그림 7〉 학력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64
〈그림 8〉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학력별 분해 ...	68
〈그림 9〉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학력별 분해 ...	74
〈그림 10〉 남성 기혼자 인구분포 .....	79
〈그림 11〉 여성 기혼자 인구분포 .....	80
〈그림 12〉 혼인상태별 남성경제활동참가율 .....	82
〈그림 13〉 혼인상태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84
〈그림 14〉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혼인상태별 분해 .....	88
〈그림 1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혼인상태별 분해 .....	92
〈그림 16〉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학력과 혼인상태 를 동시에 고려한 분해 .....	97
〈그림 1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 학력과 혼인상태 를 동시에 고려한 분해 .....	102
〈부록 그림〉 성·연령별 고용률 추이 .....	126

## I. 서론

- ▶ 최근 20년 동안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율)은 61%에 정체되어 있어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해
  - 남성경활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현재 73%를 기록
  - 여성경활율은 1997년 이후 50% 수준에 정체
- ▶ 경활율 정체의 원인으로 고용취약계층의 낮은 경활율이 거론
  - 고용취약계층은 20대 청년층, 출산·육아기 여성,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가리킴.
  - 청년층의 취업준비 장기화 및 학력과잉,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등이 경활율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 본 연구는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여타 인구집단의 경활율 추이를 학력과 혼인상태의 추이로 얼마나 설명 가능한지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고학력화 추이 및 경력단절의 시작점인 결혼의 추이가 경활율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성·연령·출생연도로 구분된 집단별 경활율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세분화된 집단을 분석대상으로 삼음.
    - Oaxaca-Blinder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학력과 혼인상태의 변화 등 각 요인이 경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측정값으로 제시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고용취약계층의 경  
활을 및 고용률 제고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  
향을 논의함.

## II.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제고 정책

###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현행 정책 및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인턴지원대상자는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34  
세인 자, 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상시근  
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 인턴 채용 중소기업에게 약정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 원) 지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65만  
원\*6개월 추가 지원,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30% 한  
도 인턴 채용 가능
-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방안
  - 스펙초월 멘토스쿨 확대
  -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능력중심 인사관리제도 확산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훈련·경력·자격을 학위와 동등하게  
인증
-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
  - 남성육아휴직 촉진, 비정규직 육아휴직 이용지원, 시설보육 확충  
등 경력단절 예방
  - 재취업 지원 강화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가족 친화 인증 확대 등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 정년연장지원금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정년 연장한 사업장 혹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장에 6개월~2년간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장년취업인턴제
  - 인턴지원대상자는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인 자, 대상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인턴기간 (최대 4개월) 중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 원)을 지급, 정규직 채용 시 6개월간 월 65만 원 추가 지급

### III. 데이터 및 분석방법 소개

- ▶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1986~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수록기간이 긴 편이고 관측치 수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
    - 1986년 이후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반복횡단면 자료의 특성상 관측치 수가 유의한 평균값을 측정하기에 충분히 큼.
    - 모집단은 1936~1988년에 태어난 15~64세 남녀로 제한
    - 연령집단은 5세(예: 15~19세), 출생연도는 1개 연도(예: 1950년생) 단위 사용
- ▶ 출생연도별 분석과 요인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집단별 경황율과 학력·기혼을 추이의 관련 정도를 양적 측정값으로 제시
  - 출생연도별 분석은 연도별 분석에 비해 인구집단의 특성을 동일하게 제어하기 더 수월

- 요인분해는 다음의 식을 이용

$$\begin{aligned} \bar{y}_t - \bar{y}_s &= \sum_d \pi_t^d \cdot \bar{y}_t^d - \sum_d \pi_s^d \cdot \bar{y}_s^d \\ &= \sum_d \pi_t^d \cdot \bar{y}_t^d + \sum_d \pi_t^d \cdot \bar{y}_s^d - \sum_d \pi_t^d \cdot \bar{y}_s^d - \sum_d \pi_s^d \cdot \bar{y}_s^d \\ &= \underbrace{\sum_d \bar{y}_s^d \cdot (\pi_t^d - \pi_s^d)}_{\text{집단구성비 변화효과}} + \underbrace{\sum_d \pi_t^d \cdot (\bar{y}_t^d - \bar{y}_s^d)}_{\text{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end{aligned}$$

- $y^d$ 는 집단  $d$ 에 속한 개인의 경제활동참가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pi^d$ 를 집단  $d$ 의 인구구성비율,  $\bar{y}^d$ 를 집단  $d$ 의 평균경황율,  $s$ 와  $t$ 는 출생연도
-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출생연도  $s$ 와  $t$  집단 사이의 경황율 변화분 중  $d$ 의 인구구성비를 변화로 설명 가능한 변화분,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집단  $d$ 의 인구구성비를 변화로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의미

#### IV. 고용취약계층의 경황율 추이와 학력, 혼인상태와의 상관관계

- ▶ 연령·출생연도별 경황율 추이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남성경황율 추이는 연령과 출생연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대부분 연령집단에서 약 80% 이상의 수준을 보임.
    - 10대 후반-20대 초반 연령층은 재학인구로 인해 10~60%, 60대 초반 연령층은 은퇴인구로 인해 약 60% 수준의 경황율 기록
    - 20대 남성경황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나머지 연령층 경황율은 정체

- 여성경활을 추이는 출생연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연령별로 10~60% 수준을 보임.
  - 20대 후반-30대 초반 경활율이 다른 연령층 경활율에 비해 낮은 이른바 경력단절 현상 관찰
  - 20대 후반-30대 초반 경활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나머지 연령층 경활율은 정체 혹은 완만한 감소세
- ▶ 남성과 여성의 학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 20대 후반 1983년생 남성의 약 80%, 동일연령·동일년생 여성의 약 76%가 초대졸·대중퇴 이상의 학력 보유
  -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확인
- ▶ 남성은 학력별 경활율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은 크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학력별 경활율 추이가 학력수준과 상관없이 전체 남성경활율 추이와 매우 비슷
    - 집단별 추이에서 학력과 경활율의 양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경활율 증가세가 뚜렷
    -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은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경활율 정체
    - 초대졸·대중퇴 이상 학력의 여성은 20대 후반·30대 초반 연령층에서 경활율 증가세 뚜렷
    - 20대 후반 여성의 추이에서 경우 학력과 경활율의 양의 관계가 나타남.
- ▶ 학력의 변화가 경활율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인구집단은 20대 후반 남녀임
  -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 1961년생과 1981년생 남성의 경활율 변화분 중 약 66%가 학력의 변화로 설명 가능

#### 14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요인분해 결과, 경활율 변화분 -13.21%p 중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는 -8.71%p
  - 20대 후반 여성의 경우, 1961년생과 1981년생 여성의 경활율  
변화분 중 약 22%가 학력의 변화로 설명 가능
  - 요인분해 결과, 경활율 변화분 28.45%p 중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는 6.30%p
  - 30대 후반 남녀의 경우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추이는 실제경활  
율 변화 추이와 반대방향으로 나타남.
  - 50대 초반 남녀의 경우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가 실제경활율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
- ▶ 남성과 여성의 기혼율(전체 인구 중 기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20대 연령층에  
서 기혼율이 급감
  - 20대 후반 남성의 기혼율은 1961년생 47%, 1981년생 17%
  - 20대 후반 여성의 기혼율은 1961년생 83%, 1981년생 40%
- ▶ 남성은 기혼, 여성은 미혼인 경우에 경활율이 높고 미혼남녀의  
경활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기혼남녀의 경활율은 정체
- 기혼남성경활율은 연령에 상관없이 80% 이상, 미혼남성경활율  
은 연령에 따라 40~90%로 다양
  - 기혼여성경활율은 30대 초반 이하 연령층이 이상 연령층에  
비해 더 낮고, 미혼여성경활율은 연령에 따른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음.

- 기혼남녀의 생활을 정체에서 예외인 집단은 20~30대 초반 기혼남녀임.
  - 20~30대 초반 기혼남성생활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폭 감소, 동일 연령대 기혼여성생활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 ▶ **혼인상태의 변화가 생활을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인구집단 역시 20대 후반 남녀임.**
  -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 1961년생과 1981년생 남성의 생활을 변화분 중 약 29%가 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 가능
    - 요인분해 결과, 생활을 변화분 -13.21%p 중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3.83%p
  - 20대 후반 여성의 경우, 1961년생과 1981년생 여성의 생활을 변화분 중 약 74%가 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 가능
    - 요인분해 결과, 생활을 변화분 28.45%p 중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20.93%p
  - 30대 후반 남성의 경우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추이는 실제생활을 변화 추이와 반대방향으로 나타남.
  - 30대 후반 여성과 50대 초반 남녀의 경우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가 실제생활을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
- ▶ **학력과 혼인상태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 학력과 혼인상태를 각각 고려했을 때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
  - 20대 후반 남녀생활율과 30대 후반 남성생활율 변화 대부분이 학력과 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 가능
    - 1961년생과 1981년생 남성의 20대 후반 생활을 변화분의 약 100%, 동일연령·동일년생 여성생활을 변화분의 71%가 학력·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 가능

- 30대 후반 남성의 경우, 1951년생과 1971년생 남성경황을 변화분의 약 83%가 학력·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 가능
- 30대 후반 여성의 경우, 학력과 혼인상태의 변화는 경황을 변화의 방향을 반대로 예측하거나 변화폭을 과대 예측함.
- 50대 초반 남녀의 경우 학력과 혼인상태의 변화로 경황을 변화를 거의 설명하지 못함.

## V. 정책 시사점 및 결론

- ▶ 본 연구는 성·연령·출생연도별 경황을 추이를 학력과 혼인상태의 추이로 얼마나 설명 가능한지 분석함.
  - 1986~2012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경황율·학력·혼인상태의 추이를 살펴본 후 요인분해방법을 통해 이들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
  - 분석결과, 학력 변화는 20대 후반 남성경황을 추이, 혼인상태 변화는 20대 후반 여성경황을 추이를 가장 잘 설명함.
    -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과 혼인상태의 설명력이 감소
- ▶ 분석결과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정책대상은 적절, 능력 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등 스펙초월 채용정책은 여성청년층 위한 보완책 필요
    - 분석결과 30대 초반 이하 남성과 20대 초반 이하 여성의 경황율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 추이를 보이므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15~34세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절함.

- 능력 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등 장기적으로 학력 구성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여성보다 남성의 경황을 제고에 더 큰 효과가 있으므로 여성장년층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 기업에게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출산·육아기 여성에게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
-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여성이 구직활동을 하여도 기업이 여성을 고용하지 않으면 여성은 취업자가 아닌 실업자로 남게 됨.
- 기업이 여성 고용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 시급

- 장년층 고용정책은 정년연장 지원책이 대부분, 여성장년층을 위한 경황을 제고 정책은 미흡

- 남성장년층에게는 고용률 제고 정책, 여성장년층에게는 경황을 및 고용률 제고 정책이 필요
- 고용률 제고 정책은 정년연장 지원책,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
- 경황을 제고 정책은 장년취업인턴제가 있지만 지원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여성장년층을 위한 고학력 경력자 대상의 리턴쉽제도는 여성장년층 중 고학력자 비율이 작기 때문에 대다수의 저학력 여성이 정책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큼.



##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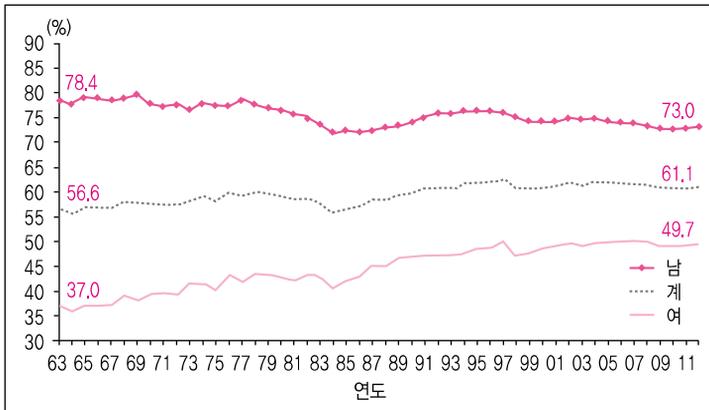
### 제 I 장 서론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 즉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율)은 한 국가의 경제활동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이다.<sup>1)</sup> 또한 경활율은 경제활동인구가 경제성장의 기본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활율로 평가한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남성경활율은 1969년 이래로 감소하여 2012년 현재 73%를 기록하고 있고, 데이터 관측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여성경활율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50%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한국의 경활율은 61%로, 1991년 이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추이



자료: 1986~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 수+실업자 수)\*100 / (15세 이상 인구수)

1)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에서 인용

최근 20년 동안 한국 경활율을 침체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고용취약계층의 낮은 경활율이 거론되고 있다. 고용취약계층은 20대 청년층, 출산·육아기 여성, 50대 이상의 장년층 등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집단을 일컫는데,<sup>2)</sup> 바로 이 고용취약계층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즉 청년층의 학력과잉 및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등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경활율과 고용률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학력 수준이 과연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집단의 경활율 추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 만약 설명한다면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출산·육아기 여성이 대부분 기혼여성인 점을 고려하여<sup>4)</sup> 혼인상태가 경활율 변화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6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출생연도별로 인구집단을 세분하고, 이러한 소집단들의 학력, 혼인상태 등 사회경제학적 특성 변화가 경활율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Oaxaca-Blinder 분해방법

2)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본 연구의 부록 참조.

3) 최근 연구의 예로 김광석(2013), 김안국·임언·최지희·유한구·김기현(2011), 김주섭(2005), 한국고용정보원(2013) 참조.

4) 200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배우출산율(단위: 명/유배우여성 1,000명당)은 25~29세인 경우 231, 30~34세인 경우 108이다. 같은 연령대의 유배우여성을 포함한 전체 여성의 출산율(단위: 명/여성 1,000명당)은 각각 94, 87이다.

을 통해 양적 측정값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특성 집단별 경황을 추이 및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경황을 및 고용률 제고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특히 고용취약계층의 경황을 추이를 여타 인구집단의 추이와 비교·분석하여 현행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경황을 및 고용률 제고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된 인구집단별로 경황을 추이를 분석하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별 평균 경황을 구하기 위해 분석데이터에 포함된 관측치 수가 충분히 커야 한다. 또한 데이터 수록기간이 길수록 시계열 추이의 비교·분석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는 약 3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월별 조사를 기초로 구축된 자료이기 때문에 관측치 수는 유의한 평균값을 측정하기에 충분히 크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관련 데이터에 비하면 수록기간이 짧은 편이기는 하나 1986년 이후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어 한국 경황의 최근 27년간의 추이에 대해 분석 가능하다.

본 연구는 경황을 추이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sup>5)</sup> 그러나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때인 1997년과 1998년 사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5) 개인의 노동 참여는 주어진 임금 하에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과 여가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고전적인 접근방법을 가정한다. 고용률 대신 경황을 분석하는 이유도 경기변동의 영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경활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경활율 하락이 실제로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아닌 관계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경활율과 경기 외적인 사회경제학적 변수들과의 관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시기는 외환위기 전후가 아닌 경활율 정체현상의 시작점인 1991년 전후이다.

한국 경활율의 전반적인 추이를 분석한 최근 연구로는 Kwon(2008), 금재호·윤자영(2011), 금재호(2011)의 연구가 있다. Kwon(2008)은 1980~2005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행태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의 특징 중 하나였던 “고학력일수록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 행태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학력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최근 태어난 여성일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금재호·윤자영(2011)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의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연령을 25~54세로 제한했을 때 학력과 여성경활율의 관계가 대체로 반비례함을 밝혔다. 금재호(2011)는 1986~2009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학력과 연령별 여성고용률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별임금격차의 요인분해를 통해 교육기간과 근속기간이 남녀 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경활율 추이를 요인분해방법으로 분석한 최근 연구로 배기준(2013)의 연구가 있다. 배기준(2013)은 경활율 추이는 경제 전반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성별 및 교육 수준 등의 경기 외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1993~2013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각 인구집단마다 경기에 반응하는 참가효과의 양상이 크게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모든 연구들에서는 성, 연령, 출생연도를 동시에 고려한 인구집단별 경황을 추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청년층, 출산·육아기 여성, 베이비부머 등 특정 인구집단의 경황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아내어 그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출생연도와 연령을 동일하게 제어한 특정 인구집단의 경황을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분석대상 인구집단의 범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위한 경황을 제고 정책의 방향이나 시사점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았다. 경황을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려면 우선 세분화된 인구집단의 경황을 추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향후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황을 추이에 대해 요인분해를 시도한 최근의 국외 논문으로는 Hotchkiss(2006, 2009), Fallick·Pingle(2009), Lee(2014)의 연구가 있다. Hotchkiss(2006, 2009)의 연구는 미국 경황율의 연도별 추이를 성과 연령을 이용하여 요인분해 하였다. Fallick·Pingle(2009)은 미국 경황율의 출생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으나 고령화가 경황율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연령만을 이용하여 요인분해하였다. Lee(2014)의 연구가 실증분석방법의 면에서 본 연구와 가장 비슷하나, Lee(2014)의 연구는 모집단이

미국 여성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기여에 대해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경활을 및 고용률 제고정책을 간단히 소개하고, 3장에서는 분석 자료로 쓰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주된 분석방법인 Oaxaca-Blinder 분해 방법에 대해 논한다. 4장에서는 학력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와 남녀 경활을 추이를 연령과 출생연도로 구분한 인구집단별로 살펴본다. 즉, 전체 평균경활을 추이, 학력별 경활을 추이, 혼인상태별 경활을 추이와 함께 학력과 혼인상태로 세분한 소집단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살펴본 후, 경활을 변화의 요인분해를 통해 학력과 혼인상태가 각 인구집단의 경활을 변화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경활을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한 후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제Ⅱ장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제고정책





본 장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현행 정책 및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청년층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과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방안, 출산·육아기 여성과 관련하여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 장년층과 관련하여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장년취업인턴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책 및 방안의 평가와 개선방향은 5장에서 논의된다.

## 2.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표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2014년 3월 현재)

<b>인턴지원 대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인 자</li> <li>-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li> <li>- 35~39세에 해당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함.</li> <li>-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li> <li>-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참여 자격에서 제외됨</li> </ul>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약정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50% (최대 80만 원 한도) 지원</li> <li>-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유지 시 65만 원 * 6월분(390만 원) 추가 지원</li> <li>-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3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인 이상 사업장 채용한도 20%</li> <li>• 10~50인 미만 사업장 채용한도 25%</li> <li>• 5~10인 미만 사업장 채용한도 30%</li> </ul> </li> </ul>
<b>대상 사업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li> <li>-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li> <li>- 제조업중 대기업이 고졸 이하 학력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업에 포함</li> </ul>
<b>관할부처</b>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tern/index.do>)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부지원사업이다. 현행제도는 2013년 6월 개정안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전에 실시해오던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턴 참여 대상자의 연령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표 1>에 소개되어 있다.

## 2.2.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방안

<표 2> 청년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2014년 중점 추진계획

목표	중점추진계획
직업 교육·훈련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 직무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완료하고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현장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강화 및 국민공감대 형성</li> <li>- 학교단계부터 올바른 직업관 형성</li> <li>- 청년의 조기 취업을 위한 先취업 後학습 확산</li> <li>- 산업수요 맞춤형 훈련체계 구축</li> </ul>
능력중심 채용·인사관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선호 분야 중심으로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확대(10개, 500명),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더 많은 기업이 활용(180개소) 토록 지원</li> <li>- 10개 선도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중심 인사관리 제도를 확산하고, 업종별 협회와 협력하여 민간기업에도 도입 지원</li> <li>-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국가역량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훈련·경력·자격을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함으로써 학위·학벌 없이도 채용·보수·승진 등에서 동등 대우받도록 추진</li> </ul>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li> <li>-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금액 확대</li> <li>- “강소기업 청년 서포터즈”(500명) 확대를 통해 청년들 눈높이에서 생생한 일자리 정보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등 정보의 질 제고</li> </ul>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망 전략산업 분야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에 맞는 맞춤형 고속권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li> <li>- 해외취업을 위한 K-Move 사업 본격 추진 및 성과 관리 강화</li> <li>- 新직업 육성 추진계획 마련 및 본격 추진을 통해 新 일자리 창출 유도, 이해관계가 참여한 직업은 공청회 등으로 적극 조정</li> <li>-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를 처음 시행(‘14~16)</li> </ul>

자료: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청년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중점 추진계획의 핵심은 채용·인사 문화를 학위·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중소기업 및 유망산업 등으로 청년 일자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sup>6)</sup>을 활용한 훈련·경력·자격을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일반고 비진학 학생을 비롯한 청년에게 일·학습 병행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2012년 7월 발표한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 방안”이 고졸 학력자에 치중된 방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보다 더 포괄적인 청년 고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방안을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청년층 관련 업무추진계획은 <표 2>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

6)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http://www.ncs.go.kr/nos/dispatcher.jsp?p\\_menu=81](http://www.ncs.go.kr/nos/dispatcher.jsp?p_menu=81)) 참조

### 2.3.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

2014년 2월 발표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모성보호,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여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신·출산기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한 보육·돌봄 지원, 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확대, 유연근무 환경 조성 등의 고용문화 개선 등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과제 및 시행시기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

목표	내용	시행시기
경력 단절 예방	- 남성 육아휴직 촉진	
	-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1개월 급여 인상(1달)	'14.10월
	- 육아휴직에서 '부모육아휴직'으로 제도명 변경	'14.3월
	- 비정규직 육아휴직 이용지원	
	- 육아휴직 시 출산육아기 계속고용지원금 지원	'14.10월
	- 대체인력 채용지원	
	- 대체인력뱅크 구축 지원	'14.3월
	-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14.1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연장	'15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급여 인상	'14.10월
	- 시설보육 체계 다양화	
	- 시간제보육반 도입	'14.8월(시범), '15.3월(시행)
	-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4.3월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14.6월
	- 직장어린이집 관련 과밀부담금 감면	'15년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 평가인증 의무화	'15년	

〈표 3〉 계속

목표	내용	시행시기		
경력 단절 예방	- 아이돌봄 확대 · 아이돌보미 4대보험료 지원, 이용단가 현실화 · 공익기관 이용 시에도 정부 지원 · 영아 중일제 돌보미 공급 단계적 확대 · 취업모 중심 우선순위 조정	'14.1월 '15년 1분기 '15년 1분기 '14.5월		
	- 초등돌봄 확대 · 초등돌봄교실 단계적 확대	'14~'16년		
	- 보육·돌봄 연계 강화 · 중앙·시도·시군구 돌봄협의체 활성화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운영 · 보육·돌봄협의체 구성	'14.3월~ '14.2월 '16년 상반기		
	재취업 지원	- 재취업 지원 강화 ·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 유형별 새일센터 시범운영 · 전문직종 및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기업체 환경개선 지원 확대 ·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지원 · 새일센터 취업여성 고용유지 현황 조사	'14.6월 '14.5월 '14.3월 '14.2월 '14.1월 '14.6월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시간선택제 인프라 확충	'14.2월 '14.12월	
		여성 친화적 고용 문화 조성	- 민간 스마트워크 활성화 · 민간 스마트워크 센터 설치 지원 · 법·제도·기술적 기반 조성 · 민관협의체 구성	'14.4월 '14.5월 '14.7월
			- 인식개선 캠페인(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 - 가족친화 인증 확대	'14.1월
			- 공공부문 인증의무화 및 업무평가 시 반영 · 중소기업 인증참여 확대, · 우수사례 전기업 확산, 신청기업 컨설팅 실시	'14.9월 '14.1월 '14.1월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명단공표 · 명단공표제 세부내용 마련 · 적용 업종분류 세분화	'14.12월 '14.6월
			- 여성인재육성(여성인재 아카데미·DB 관리) - 민관협력 체계 구축(민관협의체 구성) - 일·가정 양립 지표(지표 체계 구축)	'14.3월~ '14.5월 '14.5월

자료: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2014년 2월 4일 관계 부처 합동발표)

## 2.4. 정년연장 지원금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은 정년퇴직을 앞둔 장년층의 고용연장을 통해 장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사업내용은 <표 4>와 <표 5>에 각각 소개되어 있다.

<표 4> 정년연장 지원금(2014년 1월 현재)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고용한 사업주</li> <li>- 정년 폐지 또는 정년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새로 설정(기존에 정년 규정이 없었던 경우)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 경과 다음 날(종전 정년이 56세 미만인 경우는 56세가 되는 날부터), 정년의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을 아래 기간 동안 지원</li> <li>•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 1년</li> <li>• 정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 2년</li> <li>*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li> </ul>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info/aged/view.jsp?cate=2&sec=2>)

<표 5>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2014년 1월 현재)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li> <li>- 계속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li> <li>- 고용 전 3월간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는 지원 제외</li> </ul>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 원씩 아래 기간 동안 지원</li> <li>•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년)</li> <li>•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 1년(500인 이하 제조업은 2년)</li> <li>*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li> </ul>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info/aged/view.jsp?cate=2&sec=1>)

## 2.5. 장년취업인턴제

정년연장 지원금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이 장년층 고용률 제고 정책이라면, 장년취업인턴제는 장년층의 경황을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이다. 청년취업인턴제와 지원액은 같다. 사업 내용은 <표 6>에 소개되어 있다.

**<표 6> 장년취업인턴제(2014년 3월 현재)**

<b>인턴지원 대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자</li> <li>- 참여 제외: 신청자가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li> </ul>
<b>지원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기업에 대해 인턴기간(최대 4개월) 중 약정임금의 50%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채용 시 6개월간(월 65만 원) 추가 지원</li> </ul>
<b>대상 사업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li> <li>- 참여 제외: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li> </ul>

자료: 고용노동부 장년인턴제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info/aged/view.jsp?cate=5&sec=4>)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제III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 소개





### 3.1. 데이터 소개

본 연구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1986~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정부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로 이용되고 있는 반복횡단면 자료이다.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약 3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5세 이상의 내국인<sup>7)</sup>을 모집단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값의 표준오차를 줄이기 위해 1936~1988년에 태어난 15~64세의 남녀로 모집단을 제한했다.<sup>8)</sup> 연령 집단은 5세 단위로 묶어 총 10개 집단으로 분류했고, 출생년도는 각 1개 연도를 이용하였다.

7) 15세 이상 인구 중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된다.

8) <그림 1>은 예외이다. <그림 1>은 15세 이상 남녀를 기초로 한다.

### 3.2. 분석방법

경활율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하는 여타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출생연도별 경활율 추이를 분석한다. 경활율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특성별 인구집단의 평균 경활율 추이를 살펴보려면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환경을 집단별로 동일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본 연구는 연도별 분석이 아닌 출생연도별 분석을 택하였다. 동일한 출생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겪게 되는 생애 단계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각 생애 단계에서 노출되는 환경을 동일하도록 제어하기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집단을 성과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개인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참가 결정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각 인구집단별로 비교하였다. 물론 연도와 출생연도 간의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추이는 얼마든지 연도별 추이로 호환하여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0년인 25~29세의 여성의 경활율은 2005년 25세, 2006년 26세, 2007년 27세, 2008년 28세, 2009년 29세의 여성경활율과 완벽한 대응을 이룬다.

경활율 추이 변화를 학력 혹은 혼인상태의 변화(혹은 두 특성의 동시 변화)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는 정략적인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axaca-Blinder 분해 방법

을 이용하였다. Oaxaca-Blinder 분해 방법은 두 변수의 격차를 이해하려 할 때, 그 격차를 특정 변수의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분해함으로써, 특정변수가 두 변수의 격차를 설명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주로 남녀 간의 격차, 백인과 흑인 간의 격차에 대한 정량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의 격차가 각기 다른 두 출생연생 경활율의 격차이고, 이 격차를 설명하는 특정 변수는 학력과 혼인상태이다. Oaxaca-Blinder 분해 방법을 본 연구의 주제에 맞추어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sup>9)</sup>

$y^d$ 는 집단  $d$ 에 속한 개인의 경제활동참가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y^d = 1$ 이면 경제활동인구,  $y^d = 0$ 이면 비경제활동인구)라 가정하고,  $d$ 는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학력수준 혹은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d$ 가 학력일 경우,  $d = 1$ 이면 고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집단,  $d = 2$ 이면 2년제 대학졸업생 및 4년제 대학 중퇴생 집단,  $d = 3$ 이면 4년제 대학졸업생 집단을 의미한다.  $d$ 가 혼인상태일 경우,  $d = 1$ 이면 기혼자 집단,  $d = 0$ 이면 미혼자 집단을 의미한다.  $\pi^d$ 를 집단  $d$ 의 인구구성비율,  $\bar{y}^d$ 를 집단  $d$ 의 평균경활율이라 정의하면, 경활율  $\bar{y}$ 는  $\sum_d \pi^d \bar{y}^d$  와 같다.

9) 기호 및 수식은 Lee(2014)의 연구에 소개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그렇다면 출생연도  $s$ 와 출생연도  $t$  집단 사이의 경황을 변화를 요인분해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begin{aligned}
 (1) \quad \bar{y}_t - \bar{y}_s &= \sum_d \pi_t^d \cdot \bar{y}_t^d - \sum_d \pi_s^d \cdot \bar{y}_s^d \\
 &= \sum_d \pi_t^d \cdot \bar{y}_t^d + \sum_d \pi_t^d \cdot \bar{y}_s^d - \sum_d \pi_t^d \cdot \bar{y}_s^d - \sum_d \pi_s^d \cdot \bar{y}_s^d \\
 &= \underbrace{\sum_d \bar{y}_s^d \cdot (\pi_t^d - \pi_s^d)}_{\text{집단구성비변화효과}} + \underbrace{\sum_d \pi_t^d \cdot (\bar{y}_t^d - \bar{y}_s^d)}_{\text{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
 \end{aligned}$$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집단  $d$ 의 인구구성비를 변화로 인한 출생연도  $s$ 와 출생연도  $t$  집단 사이의 경황을 변화분을 나타내고, 집단 내 참가율 변화효과는 집단  $d$  내에서의 경황을 변화로 인한 출생연도  $s$ 와 출생연도  $t$  집단 사이의 경황을 변화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d$ 가 학력이고  $s$ 가 1961,  $t$ 가 1983인 경우,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1961년생과 1983년생의 경황을 변화분 중 학력별 인구분포의 변화로 인한 경황을 변화분을 의미하고,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황을 변화, 초대졸업생 및 대학중퇴생의 경황을 변화, 대학졸업생의 경황을 변화 등 세 집단의 경황을 변화효과를 합친 효과이다. 따라서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학력의 변화로 설명 가능한 경황을 변화분인 것에 반해,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학력의 변화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황을 변화분이다.

요인분해식은 식(1)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한 예로 다음의 식(2)와 같은 요인분해도 가능하다.

$$\begin{aligned}
 (2) \quad \bar{y}_t - \bar{y}_s &= \sum_d \pi_t^d \cdot \bar{y}_t^d - \sum_d \pi_s^d \cdot \bar{y}_s^d \\
 &= \sum_d \pi_t^d \cdot \bar{y}_t^d + \sum_d \pi_s^d \cdot \bar{y}_t^d - \sum_d \pi_s^d \cdot \bar{y}_t^d - \sum_d \pi_s^d \cdot \bar{y}_s^d \\
 &= \underbrace{\sum_d \bar{y}_t^d \cdot (\pi_t^d - \pi_s^d)}_{\text{집단구성비 변화효과}} + \underbrace{\sum_d \pi_s^d \cdot (\bar{y}_t^d - \bar{y}_s^d)}_{\text{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end{aligned}$$

식(2)와 식(1)의 차이는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를 구할 때의 가중치이다. 출생연도  $s$ 를 기준 출생연도라 정의할 때, 식(1)에서는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를 구할 때의 가중치가 기준 출생년생의 특성집단별 경할율인 반면, 식(2)에서의 가중치는 비교 대상 출생년생의 특성집단별 경할율이다.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를 구할 때의 가중치는 식(1)의 경우 비교 대상 출생년생의 특성별 인구구성비율이고, 식(2)의 경우는 기준 출생년생의 특성별 인구구성비율이다. 데이터 분석결과 식(1)을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와 식(2)를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식(1)과 식(2)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식(1)을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림을 통해 제시하였고, 요인분해 결과는 그림과 표를 통해 제시하여 측정값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은 크게 특성집단별 구성비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과 특성별 집단의 경할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마지막으로 요인분해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나뉜다. 특성집단별 구성비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와 관련된

그림이고, 특성별 집단의 경황을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은 집단 내참가율 변화효과와 관련된 그림이다. 특성집단별 구성비율의 변화에 가중치(즉, 기준 출생년생의 특성집단별 경황율)를 곱한 값과 특성별 집단의 경황율 변화에 가중치(즉, 비교 대상 출생년생의 특성집단별 구성비율)를 곱한 값이 각각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이고, 이 두 가지 효과의 추이는 요인분해 결과를 보여주는 각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제Ⅳ장 고용취약계층의 경황을 추이와 학력, 혼인상태와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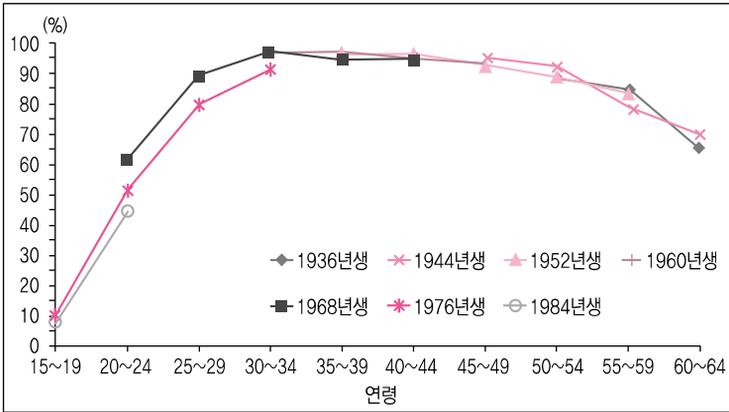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고용취약계층의 경활을 추이 분석이다. 고용취약계층이란 20대 청년층, 출산·육아기 여성, 장년층(특히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을 가리킨다. 그러나 고용취약계층의 경활을 추이를 여타 집단의 경활율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은 고용취약계층뿐만 아닌 1936~1988년 사이에 태어난 15~64세의 남녀 모두이다. 학력 및 혼인상태를 이용한 요인분해는 고용취약계층 중 20대 청년층을 대표하는 25~29세 남녀, 육아기 여성을 대표하는 35~39세 여성 및 같은 연령대의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표하는 50~54세 남녀를 바탕으로 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본 장 3.1절에서 전 연령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전체 경활을 추이를 살펴보고, 3.2절에서 학력과 경활을 추이의 관계, 3.3절에서 혼인상태와 경활을 추이의 관계, 3.4절에서 학력과 혼인상태, 경활을 동시에 고려했을 경우 세 가지 추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4.1. 전체 경황을 추이

<그림 2> 생애주기에 따른 출생연도별 남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출생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두 그림 모두 1936년생부터 1984년생까지 7개의 출생연도 집단의 연령대 변화에 따른 경황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경황을 추이가 성별에 따라 크게 차이를 알 수 있다.<sup>10)</sup> 먼저 남성경황을 추이를 보여주는 <그림 2>를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경황을 추이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역 U자형을 보이는 가운데 30대 초반에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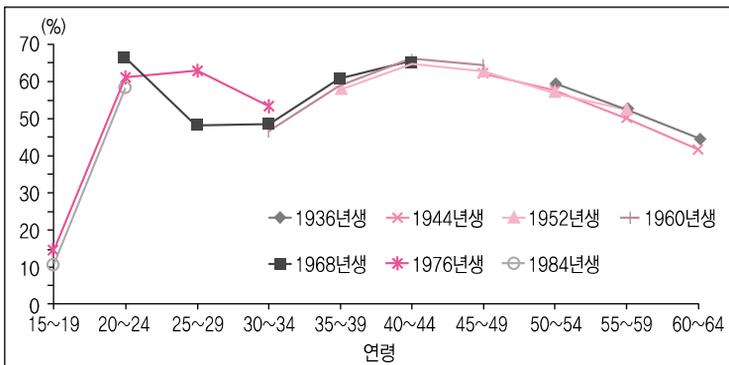
10) 8개 이상의 출생연도 집단을 그림에 포함시키면 각 출생연도 집단의 경황을 추이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7개의 출생연도 집단으로 제한하였다. 그림에 포함된 7개의 출생연도 집단은 임의로 선택된 집단임을 밝힌다. 다른 출생연도 집단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그림 3>을 그려도 두 그림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추이 패턴이 현 <그림 2>와 <그림 3>과 다르지 않았다.

대 후반까지 약 80% 후반에서 90% 대의 높은 경황율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과 1968년에 태어난 30대 초반 남성의 경황율은 각각 97%, 96%이고 같은 출생연도에 태어난 40대 초반 남성의 경황율은 각각 95%, 95%로, 출생연도와 연령집단과는 상관없이 높은 경황율을 보인다. 10대 후반 및 20대 초반의 경황율은 이 연령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구에 의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황율을 보이고,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령층인 50대부터 다시 경황율 감소 패턴이 나타나지만 감소폭은 15%p 이하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1944년에 태어난 남성의 50대 초반 경황율과 50대 후반 경황율은 각각 92%와 79%로 약 13%p 차이를 보이고 있고, 1952년에 태어난 남성의 50대 초반 경황율과 50대 후반 경황율은 각각 89%와 84%로 약 5%의 차이를 보인다. 60대 초반의 경황율도 50대 후반의 경황율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60% 후반대의 경황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1>에 나타난 전체 남성 경황율의 감소 추세는 20대 초반~30대 초반의 경황율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경황율의 출생연도별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35~54세의 연령집단은 출생연도에 따른 추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20대 및 30대 초반,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연령집단은 출생연도에 따라 경황율 패턴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중, 20대 및 3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최근 출생한 집단일수록 경황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 경황율을 살펴보면, 1968년에 태어난 남성의 경우 90%, 1976년에 태어난

남성의 경우 80%로 약 10%p가 감소하였고, 30대 초반의 경할율도 1968년에 태어난 남성의 경우 96%, 1976년에 태어난 남성의 경우 92%로 약 4%가 감소하였다. 50대 후반의 경할율은 출생연도에 따른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고, 60대 초반의 경할율은 최근 출생한 집단일수록 경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취약계층의 경할율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연령대의 경할율 추이는 최근 출생한 집단일수록 소폭 증가하였지만, 20대의 경할율 추이는 최근 출생한 집단일수록 비교적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년층 경할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이 특징인 반면에, 20대 청년층 경할율은 낮은 수준과 더불어 출생연도에 따른 감소세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층에서 경할율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학력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학력과 경할율 추이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3.2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림 3> 생애주기에 따른 출생연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여성경활율의 추이는 <그림 3>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남성 경활율과 비교해보면 생애주기별 패턴과 출생연도별 패턴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생애주기별 패턴을 살펴보면, 많은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활율은 역U자형의 남성경활율과는 달리 M자형 패턴을 보인다. M자형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의 경활율이 다른 연령대 여성의 경활율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30대 후반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이른바 경력단절 현상 때문이다. 30대 후반 혹은 그 이상 연령대에서의 경활율 패턴도 같은 연령대 남성경활율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높은 경활율을 유지하다 50대 초반부터 소폭 감소세를 보이는 남성경활율과는 달리, 여성경활율은 4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었다가 4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꾸준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960년에 태어난 여성이 30대 초반, 40대 초반, 40대 후반이 되었을 때의 경활율은 각각 46%, 66%, 64%로,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경활율이 12%p 상승한 반면에 4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이 되면서 경활율이 2%p 하락한다. 1952년생 여성이 50대 초반,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경활율은 각각 57%, 52%로 연령에 따른 하락세가 뚜렷하다. 10대 후반 여성의 경활율은 남성경활율과 마찬가지로 재학 중인 인구로 인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경활율을 보이지만, 남성경활율과는 달리 여성경활율의 경우 20대 초반 경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출생연도별 여성경황율 추이를 살펴보면, 35~64세의 연령집단은 출생연도에 따른 추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20대 및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은 출생연도에 따라 경황율 패턴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대 초반 여성의 경황율은 최근 출생한 집단일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20대 후반 여성의 경황율은 최근 출생한 집단일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1968년과 1976년에 태어난 여성의 20대 초반 경황율은 각각 66%, 61%로 5%p 감소한 반면, 같은 출생연도에 태어난 여성의 20대 후반 경황율은 각각 48%, 63%로 15%p 증가했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황율 역시 최근 출생한 집단일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용취약계층의 경황율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 장년층의 경황율은 남성 장년층의 경황율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감소 추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남성경황율과 다른 점은 경황율 수준이 남성경황율에 비해 20%p 이상 낮은 40~60%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5~35세의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황율은 1960년생, 1968년생, 1976년생을 거치면서 점점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 여성의 경황율은 1960년생 여성일 경우 46%, 1968년생 여성일 경우 48%, 1976년생 여성일 경우 53%이다. 또한,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황율 추이와 학력 및 혼인상태의 추이 변화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3.1절과 3.2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출생연도별 경황율 추이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연령 집단은 고용취약계층인

20대 초반과 50대 초반으로, 이들 집단의 감소 추세가 〈그림 1〉에 나타난 최근 15년간 여성생활의 정체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2. 학력별 인구구성 변화와 경활율 추이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가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더 높은 학력에 대한 기회비용을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더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으려 한다는 가설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한국의 경활율 추이는 남성의 경우 감소세, 여성의 경우 증가세 이후 정체를 보인 반면, 남성과 여성의 학력수준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언뜻 보기엔 학력과 경제활동참가 간의 양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학력이 과연 경활율 추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학력의 변화로 경활율 추이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본 절에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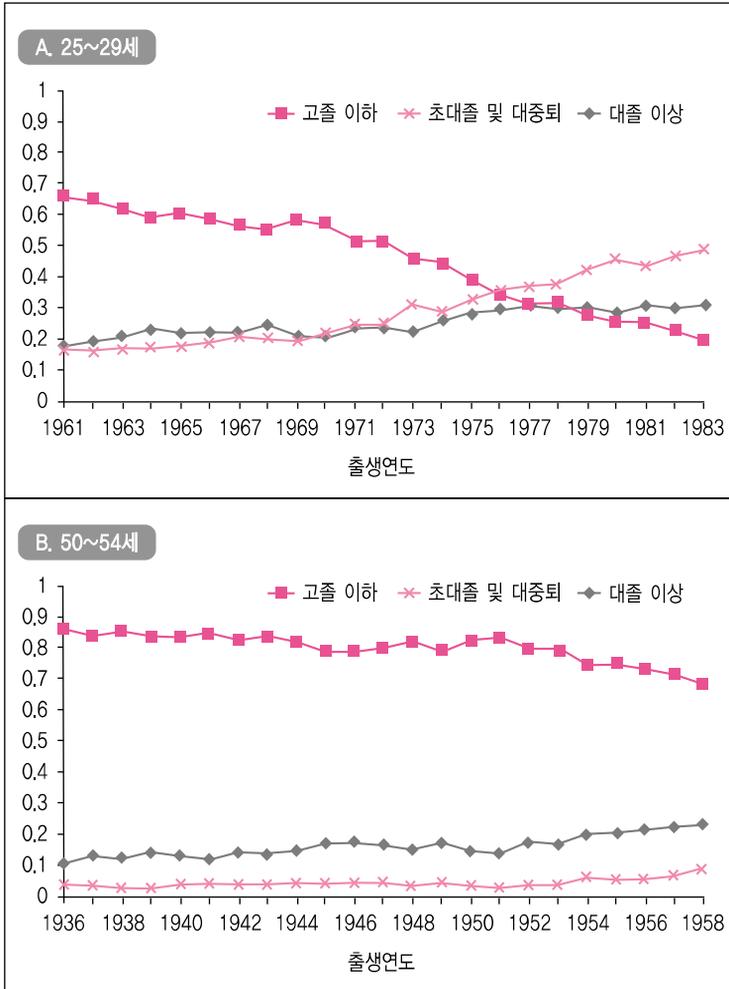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학력을 크게 고졸 이하, 초대졸 및 대졸퇴, 대졸 이상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학력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이다. 그러나 4년제 대학 졸업생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두 가지만을 이용한 분류를 이용하여도 본 보고서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출생연도에 따른 학력별 남성 인구분포와 학력별 여성 인구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A〉를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이 1961년생의 경우 전체 25~29세 남성의 약 6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후에 태어난 남성일수록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973년생을 기점으로 25~29세 남성인구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남성의 비율이 그렇지 못한 남성의 비율을 초과하였고, 1983년 생 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자는 전체 남성의 약 20%에 불과하였다. 1979년 이후에 태어난 25~29세 남성 사이에서는 초대졸 및 대학 중퇴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많았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 교육을 받는 남성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더 많은 남성들이 4년제 대학 졸업보다는 전문대 졸업 혹은 4년제 대학 중퇴를 택하였고, 그 결과 초대졸 및 대졸 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1969년 이전 출생집단에서는 초대졸 및 대졸 학력자의 비율보다 높았지만, 1970년 이후 출생집단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역전되었고 비율의 격차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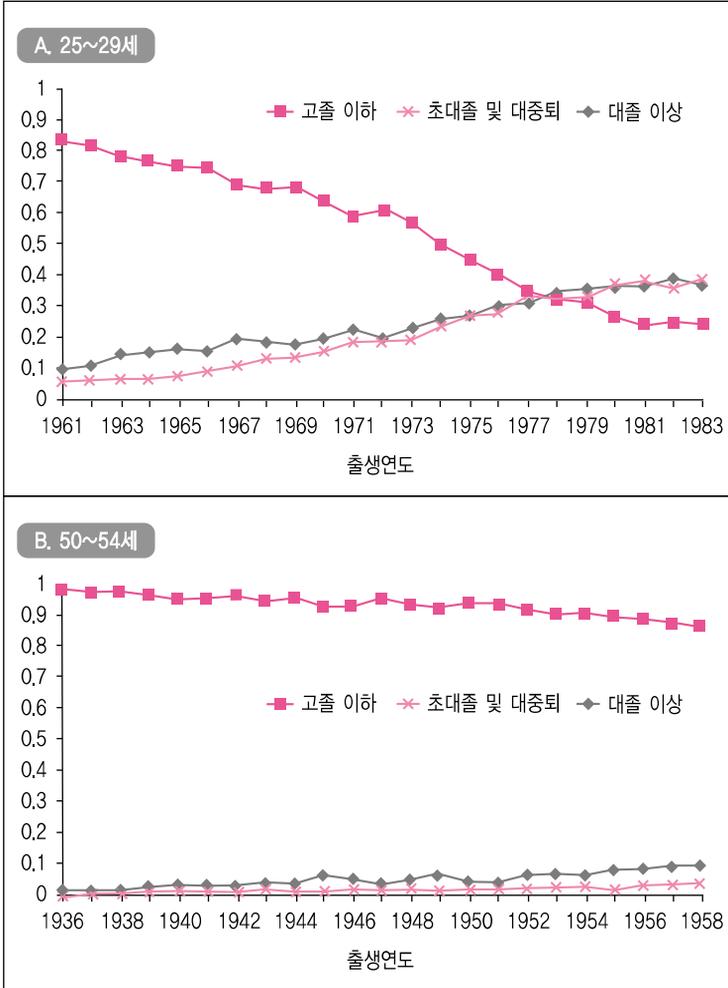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 중 고학력자의 비율이 얼마나 급격한 증가를 보였는지 50대 초반 연령대의 학력별 인구구성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보다 확실해진다. <그림 4B>는 50~54세 남성의 학력 분포를 출생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패턴이 <그림 4A>에서 보여지는 것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1958년생 남성이 50~54세가 되었을 때 이들 중 약 68%가 고졸 이하의 학력자였고, 그 이전 출생집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여 같은 연령대의 1936년생 남성 중 약 86%가 고졸 이하의 학력자였다. 50~54세 남성 중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초대졸 및 대학중퇴 학력자의 비율보다 항상 컸고, 두 비율의 추이는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그림 4> 학력별 남성 인구분포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그림 5> 학력별 여성 인구분포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학력의 증가는 여성에게도 발견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성의 학력 변화 추세는 남성의 학력 변화 추세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력의 증가세가 남성보다 빠르다. <그림 5A>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25~29세 여성의 비율이 최근 태어난 여성일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1961년생 여성 사이에서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율이 동일년생의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감소세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1961년에 태어난 25~29세 여성 중 약 84%가 고졸 이하 학력자였지만, 1983년에 태어난 동일연령대 여성 중에는 약 20%만이 고졸 이하학력자였다. 대학 교육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의 비율보다 커지는 시점도 1974년생으로, 남성에 비해 1년 느리다. 또한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초대졸 및 대졸 학력자의 비율이 대졸 여성의 비율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두 학력자가 인구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와 달리 거의 비슷하다. <그림 5A>에서 보듯이, 1972년 이전 출생집단에서는 대졸 이상 학력자가 초대졸 및 대졸 학력자보다 많았지만 그 이후 출생집단 사이에서는 두 학력자의 비율이 거의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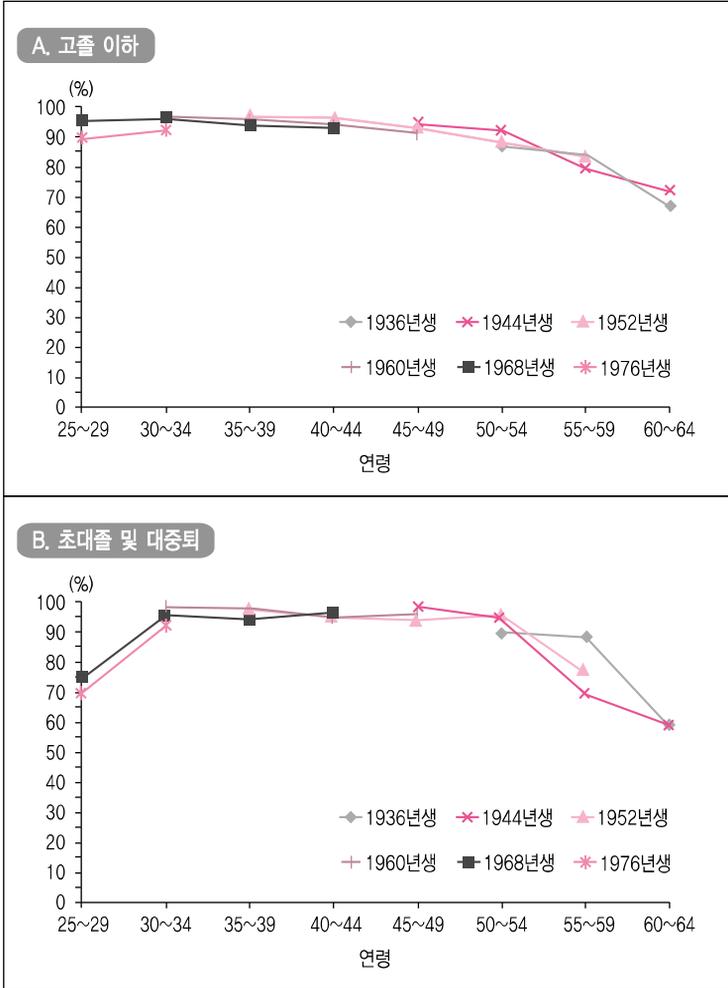
<그림 5B>는 50~54세 여성의 학력분포를 출생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율과 그 이상의 학력자의 비율로 양분된 패턴이 <그림 4B>에서 본 남성의 경우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1958년생 50~54세 여성의 경우 약 86%가 고졸 이하 학력자였고 그 이전에 태어난 여성일수록 그 비율도 증가하여 1936년생 동일연령대 여성 중 약 97%가 고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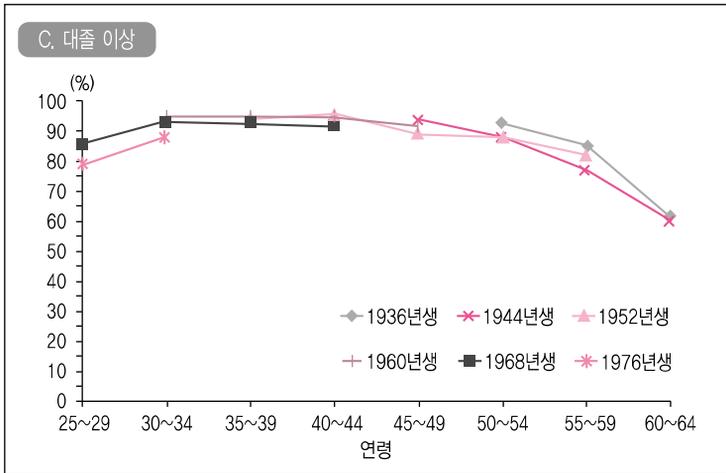
학력자였다. 1958년생 50대 후반 여성에게 나타나는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율이 1936년생 동일연령대 남성에게 나타나는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율과 같은 것이다. <그림 4>와 <그림 5>를 비교해보면, 50~54세 연령대에서는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율이 모든 출생연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25~29세 연령대에서는 달랐다. 1981년생은 남성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율이 여성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율보다 오히려 높다. 따라서 지난 23년간 남성과 여성의 학력 수준은 모두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학력 수준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6>과 <그림 7>은 각각 학력별 남성경활을 추이와 학력별 여성경활을 추이를 보여주는데, <그림 4>와 <그림 5>가 경활율과 상관없이 세 개 학력집단 구성비율의 추이를 보여주었다면 <그림 6>과 <그림 7>은 각 학력집단 내에서 경활율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제시함으로써 학력과 경활율 추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먼저 <그림 6>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 모든 학력 집단, 모든 출생연생에서 남성경활율은 60%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생애주기별 남성경활율은 30대 후반 이후 학력과 상관없이, 90% 이상의 높은 수준이 50대 초반까지 유지되는 수평적 패턴을 보인다. 또한, 학력과 경활율의 양의 관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그림 6A>에 나타난 고졸 이하 남성의 경활율 추이와 <그림 6C>에 나타난 대졸 이상 남성의 경활율 추이는 변화양상뿐만 아니라 경활율 수준까지 매우 비슷하다.

<그림 6> 학력별 남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생애주기별 경활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사이의 경활율은 상승세, 그리고 50대 후반 이후 연령대 사이의 경활율 추이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변화 양상은 학력 집단마다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1968년생 남성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경활율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남성의 경우 각각 95%, 96%였고, 초대졸 및 대중퇴 남성의 경우 각각 73%, 96%, 마지막으로 대졸 남성의 경우 각각 89%, 97%를 보였다. 30대 초반 남성경활율은 세 학력집단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대 초반 남성의 경활율은 고졸 이하 학력자, 대졸 학력자, 초대졸 및 대퇴자 순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로 1944년생 남성의 50대 초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경활율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남성의 경우 각각 92%, 79%, 72%였고, 초대졸 및 대중퇴 남성의 경우 각각 96%, 70%,

59%, 마지막으로 대졸 이상 남성의 경우 92%, 80%, 62%를 보였다. 세 학력집단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초대졸 및 대퇴자 남성 사이에서 감소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추이의 변화 역시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연령대의 모든 학력집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 연령대에서는 90% 이상의 수준에서 형성된 경활율이 출생연도에 따른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학력과 상관없이 최근에 출생한 남성일수록 경활율이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1968년생 남성이 25~29세가 되었을 때, 고졸 이하 학력자이면 95%, 초대졸 및 대중퇴 학력자이면 75%, 대졸 이상 학력자이면 89%의 경활율을 보였다. 반면에 1976년생 남성이 25~29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졸 이하 학력자이면 89%, 초대졸 및 대중퇴 학력자이면 70%, 대졸 이상 학력자이면 81%의 경활율을 보여 1968년생 남성에 비해 모든 학력집단에서 낮은 경활율을 보였다.

고용취약계층인 20대 후반 남성의 경활율은 모든 학력집단에서 최근 출생연도일수록 감소세를 보인 반면, 또 다른 고용취약계층인 50대 후반 남성의 경활율은 모든 학력집단에서 최근 출생연도일수록 증가세를 보였다. 20대 후반 남성의 학력별 경활율은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초대졸 및 대중퇴 학력자의 순으로 높았던 반면, 50대 초반 남성의 학력별 경활율은 초대졸 및 대중퇴, 대졸 이상, 고졸 이하 학력자의 순으로 높아 20대 후반의 남성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림 7〉은 학력별 여성경활율 추이를 보여주는데, 여러 면에

서 학력별 남성경활을 추이와 다르다. 모든 학력집단에서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수평적 패턴을 보이는 남성경활을 추이와 달리, 여성경활을 추이는 연령대별, 학력집단별, 출생연도별 경활을 추이의 차이가 매우 크다. 경활을 수준도 17%(1944년생 60대 초반 대졸 여성)부터 69%(1968년생 40대 초반 초대졸 및 대중퇴 여성)까지 보이고 있어 남성경활을 수준보다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과 경활율의 양의 관계는 일부 인구집단의 추이에서 발견되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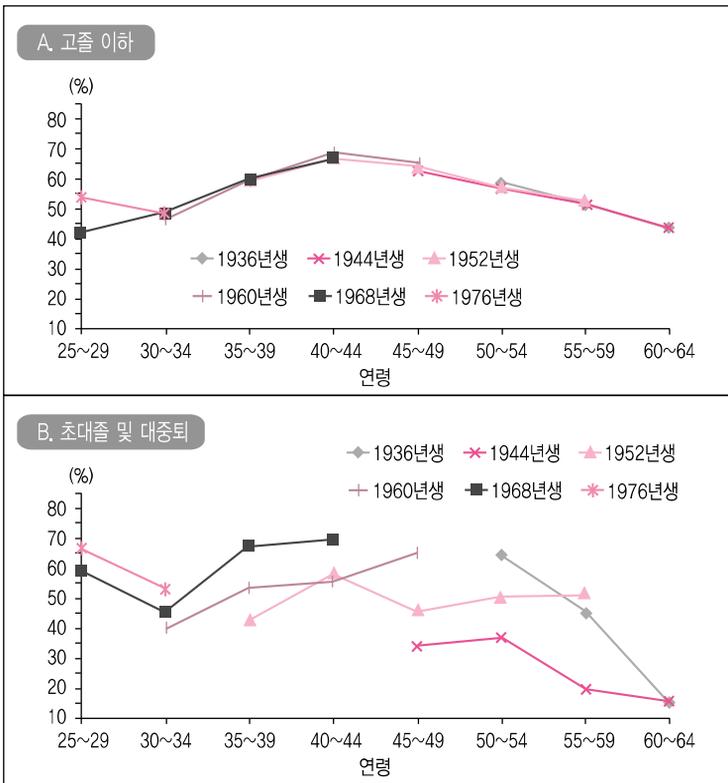
생애주기별 여성경활을 추이는 학력집단별로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1968년생 고졸 이하 여성을 제외하면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경활율이 폭 꺼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40대 초반까지는 증가세를 보이거나 40대 후반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각 학력집단의 공통된 연령별 패턴을 찾아볼 수 없다. 고졸 이하 여성을 바탕으로 한 <그림 7A>를 살펴보면, 연령별 추이가 완만한 역U자형을 보이며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고졸 이하 남성의 추이와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초대졸 및 대중퇴 여성과 대졸 여성을 바탕으로 한 <그림 7B>와 <그림 7C>에서는 같은 출생연도에 태어난 여성이 어떤 학력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연령대별 경활율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생 여성을 예로 들면, 초대졸 및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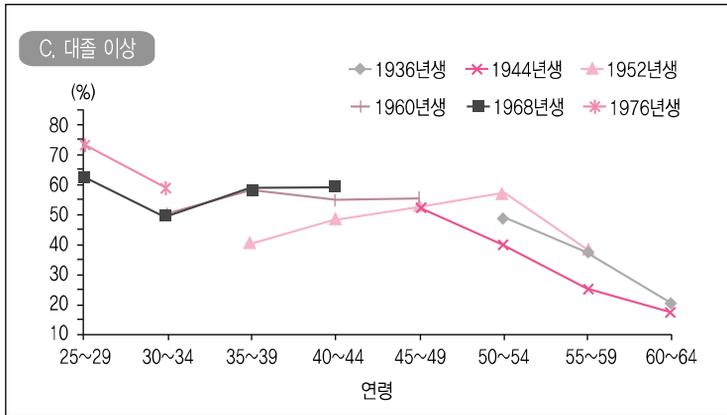
11) 본 연구는 학력과 경활율의 관계가 아닌 소집단별 경활율 추이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활율의 회귀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학력과 경활율의 관계는 성, 연령, 출생연도만을 통제한 후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더 많은 통제변수를 이용하여 도출한 회귀분석의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중퇴 여성은 40대 초반 경황율이 57%로 30대 후반과 45~59세 때의 경황율보다 더 높았지만, 대졸 여성은 50대 초반 경황율이 58%로 35~49세 때와 50대 후반 경황율에 비해 더 높았다.

출생연도별 여성경황율 추이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그림 7A>에서 보듯이 고졸 이하 학력의 25~29세 여성이 1968년생과 1976년생 사이 경황율 상승을 경험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출생연도에 따른 경황율 추이의 변화가 없었다.

<그림 7> 학력별 여성경제활동참가를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고졸 이하의 남성과 추이를 비교해보면, 출생연도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점은 동일하나 경활율이 40~60%대로 남성에 비해 약 30~50%p만큼 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림 7B>에 나타난 초대졸 및 대중퇴 여성의 경활을 추이는 1936년생과 1944년생 사이의 하락세와 1952년생과 1960년생 사이의 40대 초반 경활을 하락세를 제외하면, 최근 출생한 여성일 수록 더 높은 경활율을 보인다. <그림 7C>에서 볼 수 있는 대졸 여성의 추이도 전체적인 추이 변화는 초대졸 및 대중퇴 여성의 경활을 변화와 비슷하나, 초대졸 및 대중퇴 여성에 비해 출생연도에 따른 경활율 차이가 더 작게 나타난다.

학력과 경활율 간의 양의 관계는 1968년생과 1976년생의 20대 후반 경활을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연령대와 출생 연생 여성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968년에 태어난 여성이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의 경활율은 고졸 이하 학

력자인 경우 42%, 초대졸 및 대중퇴 학력자인 경우 59%, 대졸 이상 학력자인 경우 63%였다. 그러나 동일출생연도에 태어난 여성이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의 경활율은 고졸 이하 학력자부터 각각 60%, 67%, 58%로 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활율이 제일 낮았다.

고용취약계층인 20대 후반 여성의 경활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최근 출생한 집단일수록 증가세를 보였다. 또 다른 고용취약계층인 50대 초반 여성의 학력별 경활율은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활율이 다른 두 학력자의 경활율에 비해 항상 높아, 초대졸 및 대중퇴, 대졸 이상, 고졸 이하 학력자의 순으로 높았던 동일 연령대의 남성과 대조를 이루었다. 출산·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고학력층에서 더 심하다는 가설의 성립여부는 경력단절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 우선 경력단절이 30대 여성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이라 가정하 후 연령대별 경활율 수준을 비교해보면, 30대 후반 연령대에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활율이 제일 낮아 가설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1960년생, 1968년생, 1976년생 여성 모두 30대 초반 경활율이 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우가 다른 두 학력자의 경우에 비해 항상 높았으므로 가설이 성립하지 않았다. 반면에 경력단절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경활율 감소분으로 정의하면,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감소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층일수록 경력단절현상이 심하다는 가설이 성립되었다. 1976년생 여성을 예로 들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할 때, 고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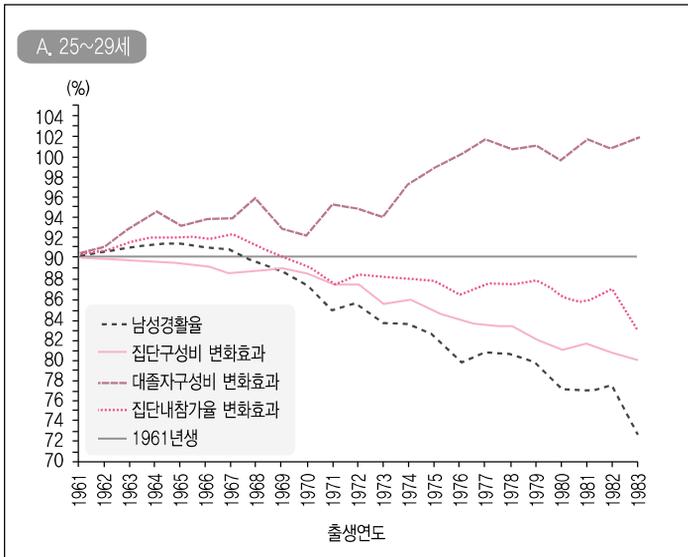
하 학력여성은 53%에서 48%로, 초대졸 학력여성은 66%에서 53%로, 대졸 이상 학력여성은 73%에서 59%로 경찰율이 감소하여, 대졸 이상 학력여성이 14%p로 가장 큰 경찰율 감소를 경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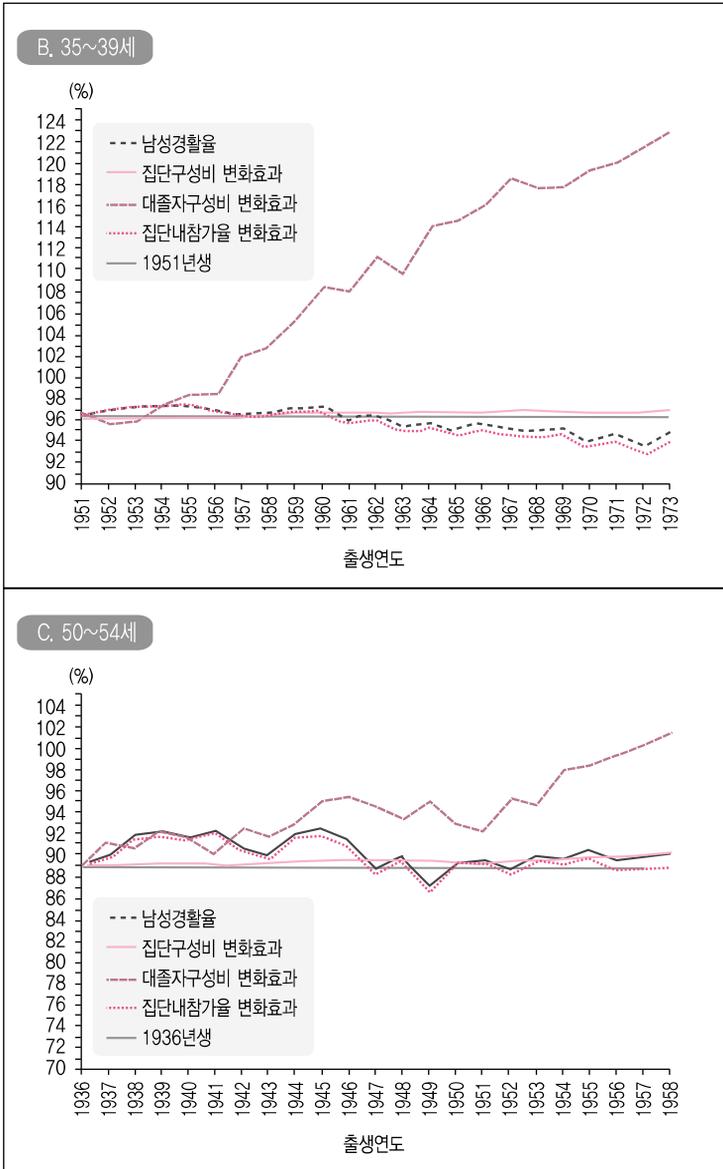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난 학력집단별 인구구성비율 추이의 변화와 〈그림 6〉과 〈그림 7〉에 나타난 학력집단 내 경찰율 추이의 변화를 결합하면 학력의 추이 변화가 경찰율 추이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2장에서 소개했던 식(1)을 이용한 Oaxaca-Blinder 요인분해이다. 다음의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남성과 여성경찰율을 학력을 이용하여 요인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그림 모두 25~29세, 35~39세, 50~54세 남성과 여성의 요인분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8〉, 〈그림 9〉, 〈그림 14〉~〈그림 17〉에서 검은색 점선은 출생연도별 경찰율을 나타내고, 청색 실선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를, 청색 점선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를 나타낸다. 학력을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의 경우, 세 개의 학력집단 중 대졸 학력자의 구성비 변화효과를 짙은 청색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를 구하려면 기준 출생연도(식 (1)에서  $s$ )를 정해야 하는데, 그림에 포함된 각 효과를 보다 해석하기 편하도록 제시하기 위해 기준 출생연도는 각 연령집단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출생연도로 정하였다. 즉,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기준 출생연도는 1961년,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기준 출생연도는 1951년, 50대

초반 연령대에서 기준 출생연도는 1936년이다. 그림의 회색 실선이 각 기준 출생연도에 태어난 남성 혹은 여성의 경황율이며, 정의상 수평선으로 표시되고 있다.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기준 출생연생의 경황율에 각 구성집단에 해당하는 구성비 변화효과를 모두 합하여 구해진다. 비슷하게 집단내참가를 변화효과 또한 기준 출생연생의 경황율에 각 구성집단 내에서의 참가율 변화효과를 구한 뒤 모두 합한 효과이다. 따라서 개개 구성집단별 효과를 그림에 표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각 효과의 확실한 식별을 위해 그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각 효과의 측정값과 개개 구성집단별 효과의 측정값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학력별 분해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표 7>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학력별 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5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36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71년생	1981년생	1961년생	1971년생	1946년생	1956년생
	(1)	(2)	(3)	(4)	(5)	(6)
경활율 차이	-5.36	-13.21	-0.26	-1.56	2.48	0.66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2.82	-8.71	0.26	0.52	0.58	0.95
고졸	-13.72	-38.77	-17.19	-34.99	-6.25	-11.12
초대졸	5.89	18.62	5.82	12.01	0.30	1.67
대졸	5.02	11.45	11.63	23.50	6.52	10.40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2.54	-4.50	-0.52	-2.08	1.90	-0.29
고졸	-1.95	-2.18	0.07	-1.11	2.07	0.44
초대졸	0.50	1.64	0.01	0.02	-0.11	-0.11
대졸	-1.09	-3.96	-0.60	-0.99	-0.06	-0.6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 제시된 숫자의 단위는 모두 %p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출생연도별 경활율 추이를 나타내는 검은색 점선과 기준 출생연생의 경활율을 나타내는 회색 실선을 제외한 두 효과의 추이 모두 실제 추이가 아닌 가상의 추이라는 점이다.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기준 출생연도의 경활율을 기준으로,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가 없고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만 있었다고 가정한 경우의 경활율 추이를 나타낸다. 비슷하게,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없고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만 있었다고 가정한 경우의 경활율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8>과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경활율 변화의 요인

분해 결과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그림 8>을 살펴보면, 남성경황율의 경우 실제로 관측되는 추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5~29세, 35~39세 연령집단에서 최근 출생한 남성 일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50~54세 집단에서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정체현상을 보인다. 20대 후반 연령대의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8A>를 보면,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모두 실제 경황을 추이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 출생연도인 1961년생의 경황율과 1970년생 혹은 그 이후 출생집단 경황율 간의 차이를 요인분해한 결과는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0년생 혹은 그 이후에 태어난 남성 사이의 경황율 변화의 상당 부분을 학력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 7>의 (1)열을 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 사이의 경황율 차이는  $-5.36\%p$ 였는데 이 중  $-2.82\%p$ 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였고,  $-2.54\%p$ 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였다. 즉, 두 출생연생 사이의 경황율 변화 중 약  $52.6\%(=2.82/5.36)$ 를 두 출생연생 사이의 학력 변화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같은 표의 (2)열을 보면, 1961년생과 1981년생 사이의 경황율 차이에서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65.9\%(=8.71/13.21)$ 로 최근 출생연생일수록 경황을 추이 변화에 있어 학력의 설명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초반 연령집단에서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이유는 음의 값을 갖는 고졸자구성비 변화효과가 양의 값을 갖는 초대졸자 및 대졸자구성비 변화효과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대졸자구성비 변화효과는 1976년

생 이후 출생집단에서 정체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0대 초반 연령집단에서 대졸 구성 비율이 1976년생 이후 정체 추세를 보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20대 초반 연령집단에서 1961년생의 경황율과 1970년생 이전 출생집단 사이의 경황율 변화는 실제 차이는 최근 출생집단일수록 증가했지만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의 변화 추이가 실제 경황율 변화 추이를 크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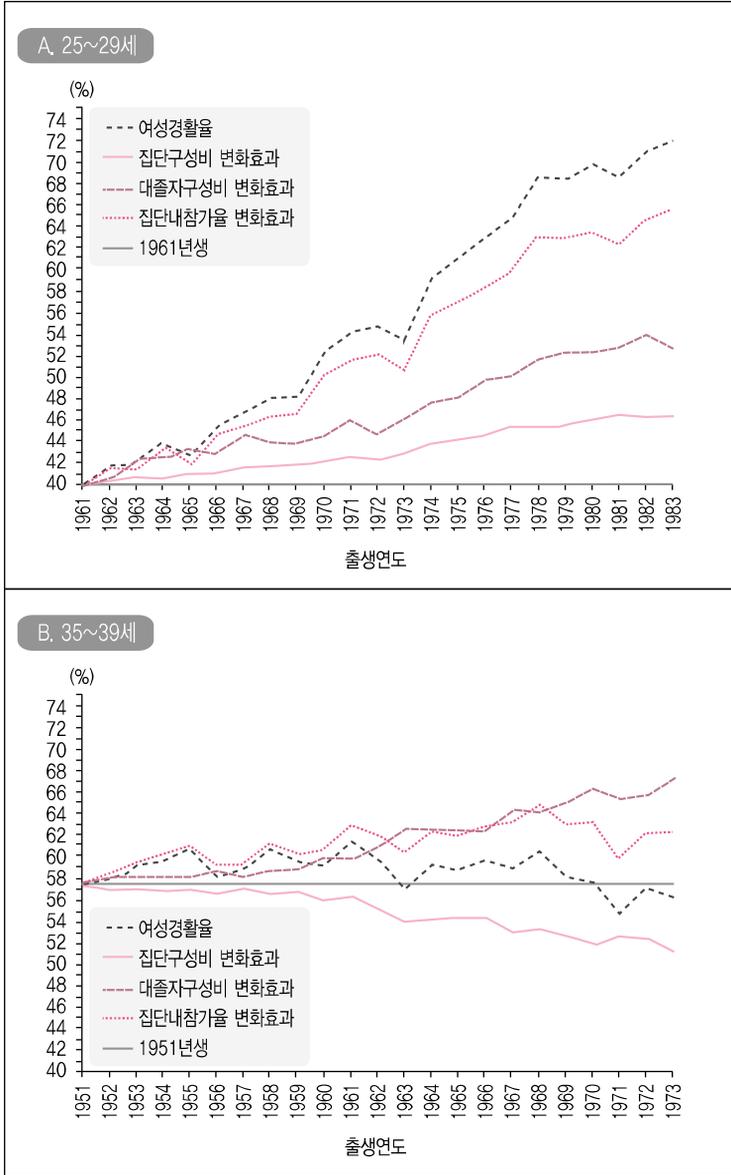
30대 후반 연령대 남성경황율의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8B>를 보면, 이 연령대 남성의 학력별 경황율 변화가 거의 없었고 학력집단 간 경황율 차이도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와 집단내 참가율 변화효과가 크지 않았다. 실제 경황율 추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추이는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아닌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였으므로 학력의 변화가 30대 후반 연령대의 경황율 추이를 설명하는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30대 후반 연령집단에서는 20대 후반과는 달리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음의 값을 갖는 고졸자구성비 변화효과가 양의 값을 갖는 초대졸자 및 대졸자구성비 변화효과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대졸자구성비 변화효과는 줄곧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추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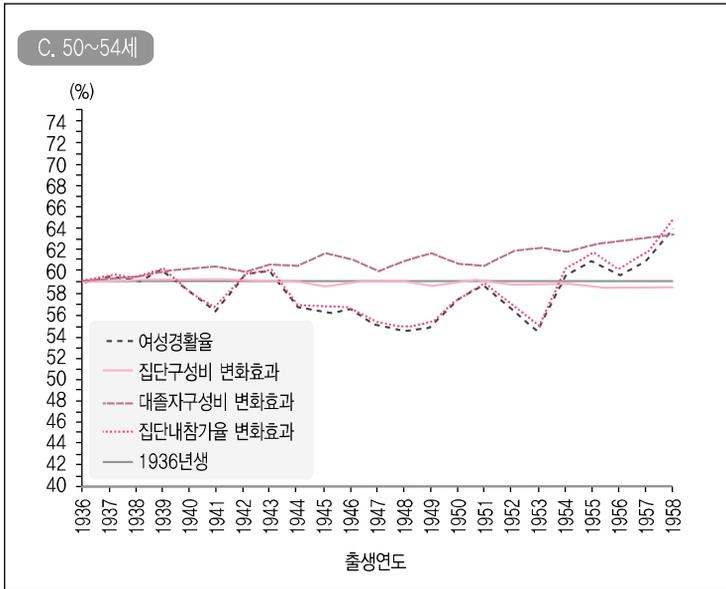
<그림 8C>는 50대 초반 연령집단의 요인분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50대 초반 연령대 역시 30대 후반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실제 경황율 변화 추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변화는 집

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아닌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이기 때문에 경황을 추이 변화에 있어 학력이 갖는 설명력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7>의 (5)열을 보면, 기준 출생연생인 1936년생과 10년 후에 태어난 1946년생 사이의 경황을 차이는 2.48%p였는데 이 중 0.58%p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였고, 1.90%p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였다. 즉, 두 출생연생 사이의 경황을 변화 중 약 23.4%(=0.58/2.48)는 두 출생연생 사이의 학력 변화로 설명 가능했지만, 나머지 76.6%는 학력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경황을 변화분이었다.

여성경황을 변화를 요인분해한 <그림 9>를 살펴보면, 50~54세 연령집단은 같은 연령대 남성경황을 변화의 요인분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대 후반과 30대 후반 연령집단의 여성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대 후반 연령대의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9A>를 보면, 기준 출생연도인 1961년생의 경황을 이후 최근 출생한 여성일수록 경황을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모두 실제 경황을 추이와 함께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연령대 남성과는 달리, 1961년생의 경황을과 그 이후 출생집단 경황을 간의 차이를 요인분해한 결과 집단내참가율변화효과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61년생 이후의 여성경황을 추이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 학력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9>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학력별 분해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표 8>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학력별 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5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36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71년생 (1)	1981년생 (2)	1961년생 (3)	1971년생 (4)	1946년생 (5)	1956년생 (6)
경황율 차이	14.06	28.45	4.07	-2.65	-2.98	0.35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2.64	6.30	-1.36	-4.94	-0.32	-0.60
고졸	-9.63	-22.68	-6.15	-22.17	-3.01	-5.64
초대졸	6.29	16.37	2.59	9.22	0.79	1.44
대졸	5.99	12.61	2.20	8.01	1.91	3.60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11.42	22.15	5.43	2.30	-2.66	0.96
고졸	4.68	4.06	3.81	-1.84	-2.53	0.94
초대졸	2.02	8.36	-0.53	-1.88	0.02	0.01
대졸	4.72	9.73	2.15	6.02	-0.15	0.0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 제시된 숫자의 단위는 모두 %p임.

예를 들어 <표 8>의 (1)열과 (2)열을 살펴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 사이의 경황율 차이는 14.06%p였는데 이 중 2.64%p만이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였고, 11.42%p가 집단내참가율 변화 효과였다. 즉, 두 출생연생 사이의 경황율 변화 중 약 18.8%(=2.64/14.06)를 두 출생연생 사이의 학력 변화로 설명 가능하였고 나머지 81.2%는 학력 이외의 요인 변화로 설명 가능했다. 1961년생과 1981년생 사이의 경황율 차이도 총 28.45%p 중 21.1%(=6.30/28.45)만을 두 출생연도 사이의 학력 변화의 추이로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양의 값을 갖는 초대졸자 및 대졸자구성비 변화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고졸자구성비 변화효과에 비해 크기 때문에 20대 초반 연령집단에서 집단구성비 변화 효과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대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출생집단일수록 빠르게 증가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대졸자구성비 변화효과가 실제 경황율 추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30대 후반 연령대의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9B>를 보면, 독특한 요인분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경황율 추이를 중심으로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양의 값을,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음의 값을 갖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음의 값을 갖는 이유는 음의 값을 갖는 고졸구성비 변화효과가 다른 효과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기준 출생연생의 경황율이 여타 학력 여성 경황율에 비해 높고, 고졸 여성의 구성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초대졸구성비 변화효과와 대졸구성비 변화효과를 압도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경황을 추이는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추이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를 초과하는 양의 값을 가졌기 때문이다.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1963년 이전 출생집단에서는 고졸내참가율 변화효과가, 그 이후 출생집단에서는 대졸내참가율 변화효과가 특히 컸는데, 이는 1963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 중 35~39세의 대졸자 여성의 행동변화가 그들의 참가율 증가로 이어져 실제 경황을 추이와의 차이를 유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졸자구성비 변화효과가 실제 경황을 추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50대 초반 연령집단의 요인분해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9C>를 살펴보면,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의 추이와 실제 경황을 추이가 거의 동일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50~54세 연령집단의 여성경황을 추이를 설명함에 있어 학력이 갖는 설명력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5B>에서 보았듯이 50대 초반 연령대의 학력 구성 비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표 8>의 (5)열을 보면, 기준 출생연생인 1936년생과 10년 후에 태어난 1946년생 사이의 경황을 차이는  $-2.98\%p$ 였는데 이 중  $-0.32\%p$ 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였고,  $-2.66\%p$ 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였다. 즉, 두 출생연생 사이의 경황을 변화 중 약  $89.2\%(-2.66/2.98)$ 는 두 출생연생 사이의 학력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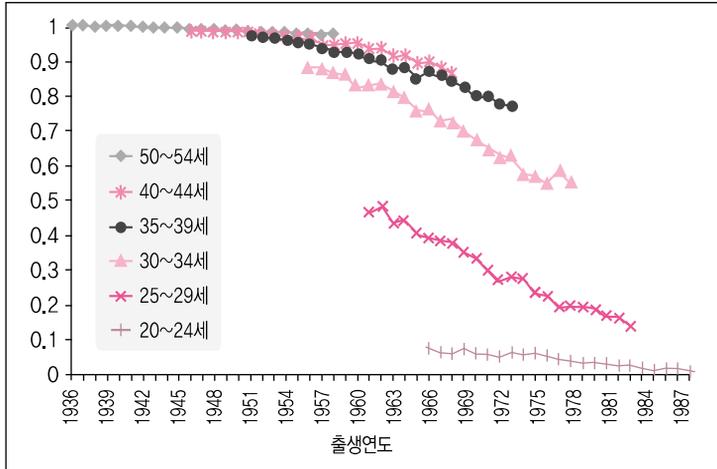
### 4.3.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변화와 경활을 추이

3.2절에서 경활을 추이와 관련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추이 중 하나인 학력별 인구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본 절에서는 경활을 추이와 관련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또 다른 추이인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우선 전체 남성 혹은 여성인구에서 기혼자, 즉 결혼한 적이 있는 모든 남성 혹은 여성<sup>12)</sup>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출생집단일수록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기혼자와 미혼자의 경활을 추이를 비교할 것이다. 많은 20~30대 여성이 결혼 혹은 출산·육아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다면, 20~30대 여성기혼자 경활율이 다른 연령대 여성기혼자와 같은 연령대 여성미혼자 경활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관찰되었는지 살펴본 후, 혼인상태를 이용한 남녀경활을 변화의 요인분해 결과를 제시하고 설명할 것이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각각 남성과 여성 기혼자 인구분포를 보여준다. 두 그림 모두 20대 초반 연령대에서 50대 초반 연령대로 갈수록 전체 남성 혹은 전체 여성인구에서 기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로 수렴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빠르게 1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본 보고서에서 기혼자는 유배우자, 배우자 사별로 인한 무배우자 혹은 이혼한 경력이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

&lt;그림 10&gt; 남성 기혼자 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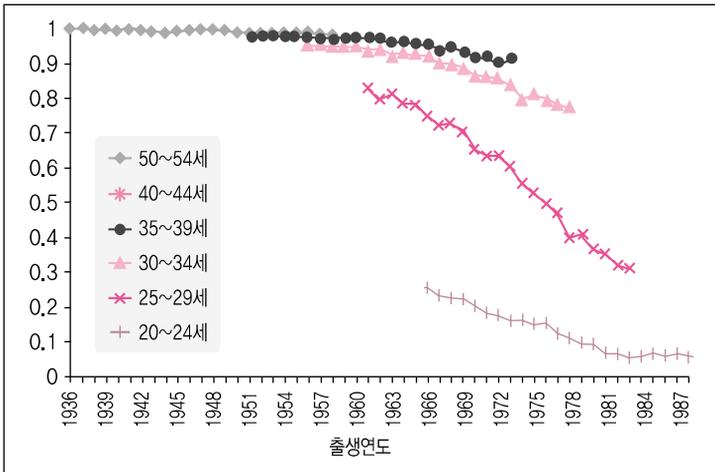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남성기혼자 인구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10>을 먼저 살펴보면, 20~44세 연령집단에서 최근 출생한 남성일수록 기혼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남성의 결혼 연령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인 20대 후반 연령집단과 30대 초반 연령집단에서 기혼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1961년에 태어난 남성이 25~29세가 되었을 경우, 동일연령대 남성 중 약 47%가 기혼자였던 반면, 1971년에 태어난 남성이 같은 연령대가 되었을 경우 전체 20대 후반 남성 중 약 30%만이 기혼자였다. 1981년생 남성의 20대 후반 기혼율은 약 17%에 불과했다. 1961년생과 1971년생 남성의 30대 후반 기혼율을 비교해보아도 각각 91%, 80%로 출생연도에 따른 기혼율 감소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30대 후반 연령집단에서 관찰할 수 있

는 가장 먼저 태어난 출생연생은 1951년생이고, 가장 늦게 태어난 출생연생은 1973년생인데, 이들의 기혼율은 각각 93%와 77%로, 21년 동안 기혼율이 16%p 감소하였다.

<그림 11> 여성 기혼자 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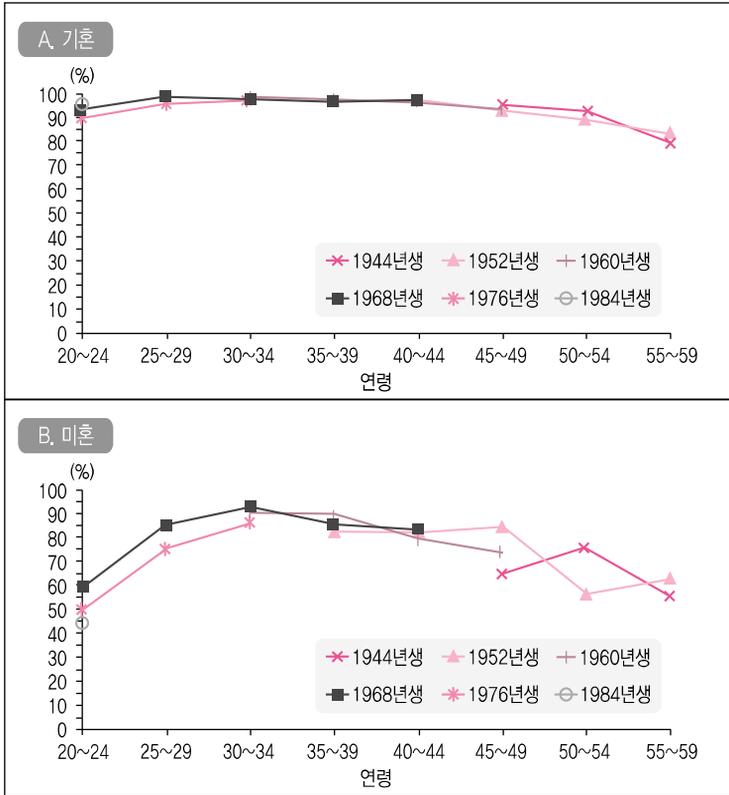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그림 11>에 나타난 여성 기혼자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른 기혼율 감소세는 남성과 비슷하나, 감소세가 남성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집단에서 기혼율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1961년생 여성의 20대 후반 기혼율은 83%, 1971년생 여성의 20대 후반 기혼율은 64%, 1981년생 여성의 20대 후반 기혼율은 40%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 기혼율은 매우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1951년생 여성과 1973년생 여성의 30대 후반 기혼율은 각각 98%, 91%로 21년 동안 7%p 차이에 그

치고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 연령이 빠르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혼인상태를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 중 30대 후반 여성의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제 이러한 기혼자 인구구성 비율의 변화가 경활율 추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혼인상태별 경활율 추이를 살펴보겠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각각 기혼남성과 미혼남성,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경활율 추이를 보여준다.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추이가 대비되었고,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의 추이는 1952년 이전 출생집단을 제외하면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우선 <그림 12A>를 살펴보면, 기혼남성의 연령대별 경활율은 <그림 2>에서 살펴본 전체 남성경활율 추이와 같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9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수평적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5세 이후의 연령대에서 45세 이전의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지만, 50대 후반 연령대의 경활율도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혼 남성의 경활율 추이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연령집단에서 출생연도에 상관없는 추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시간에 따른 추이 변화를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944년생 기혼남성의 40대 후반 경활율은 95%였고, 16년 후에 태어난 1960년생 기혼남성의 동일연령대 경활율은 94%였다. 20대 연령집단에 속한 기혼남성의 경활율은 최근 출생집단일수록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 1968년생 기혼남성의 20대 후반 경활율은 98%, 1976년생 기혼남성의 20대 후반 경활율은 95%였다.

<그림 12> 혼인상태별 남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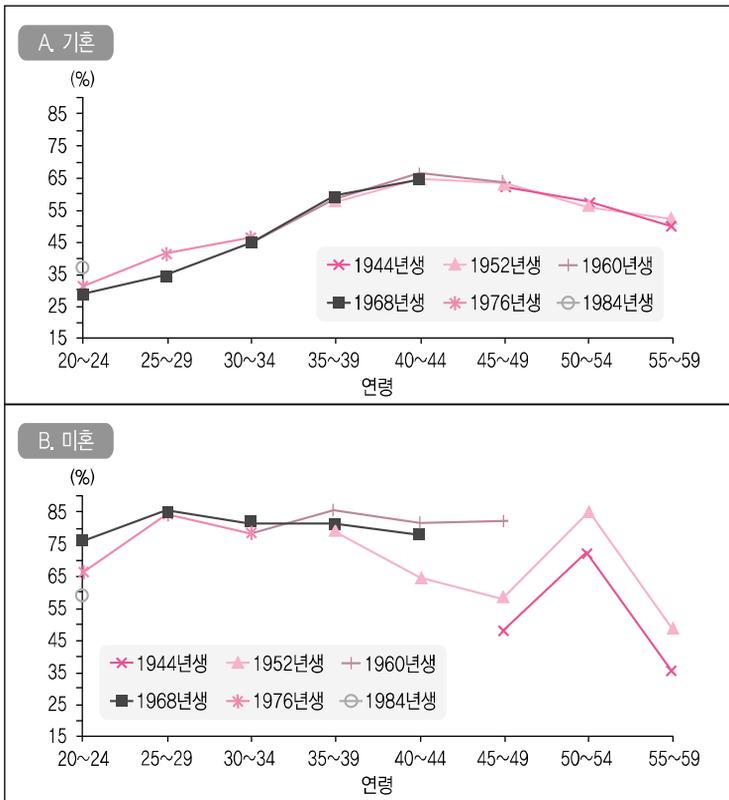
<그림 12B>에 나타난 미혼남성의 경활율은 기혼남성의 경활율에 비해 낮고, 추이 또한 <그림 12A>에서 살펴본 기혼남성의 경활율 추이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과 더불어 남성의 경활율 추이 역시 혼인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혼남성의 연령대별 경활율을 살펴보면, 40세 이후의 연령별 패턴은 뚜렷하지 않지만, 40세 이전에는 기혼남성과 같은 수

평적 패턴이 아닌 30대 초반 연령에서 가장 높은 경활율을 보이는 완만한 역U자형 패턴을 보인다. 출생연도별 경활율도 1968년생, 1976년생, 1980년생으로 갈수록 경활율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68년생 남성과 1976년생 미혼남성의 경활율 하락세가 기혼남성에서 보인 하락세에 비해 더 뚜렷했다. 예를 들어 1968년생 미혼남성의 20대 후반 경활율은 85%, 1976년생 미혼남성의 20대 후반 경활율은 76%로 9%p 하락했다. 따라서 미혼남성이 <그림 2>에서 살펴본 1968년생과 1976년생 사이의 경활율 하락에 기혼남성에 비해 더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13>에서 보이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경활율 추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림 12>에서 보이는 남성경활율의 추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그림 13A>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경활율은 <그림 3>에서 살펴본 전체 여성경활율 추이와 같이 40대 초반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여타 연령대에서 낮은 역U자형 패턴을 보였다. 경활율 수준은 같은 연령대의 기혼남성에 비해 훨씬 낮았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연령대 기혼여성의 경활율은 1960년생 여성인 경우 각각 45%, 58%, 66%였고, 1968년생 여성인 경우 각각 34%, 45%, 59%였다. 출생연도별 경활율 추이는 연령대별로 다른 추이를 보였는데, 30대 기혼여성은 최근 출생연생일수록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활율이 다른 연령대 여성에 비해 경활율이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35~39세 연령집단에 속

한 기혼여성의 경활율은 1952년생, 1960년생, 1968년생인 경우 각각 57%, 58%, 59%였다. 20대 기혼 여성의 경활율 추이 또한 최근 출생연생일수록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25~29세 연령집단에 속한 기혼여성의 경활율은 1968년생, 1976년생인 경우 각각 29%, 41%로 12%p 증가했다.

<그림 13> 혼인상태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그림 13B〉에 나타난 미혼여성의 경활율은 기혼여성의 경활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기혼여성의 경활율 추이보다는 미혼남성의 경활율 추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경활율 추이는 미혼남성의 경활율과 같이 40세 이후 연령대에서 뚜렷한 패턴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40대 이전 연령대에서는 기혼남성과 같은 수평적 패턴은 아니지만 20대 후반-30대 초반의 경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에게 발견되는 경력단절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연령대 미혼여성의 경활율은 1960년생 여성인 경우 각각 79%, 86%, 83%였고, 1968년생 여성인 경우 각각 82%, 82%, 79%로, 같은 출생연도에 태어난 기혼여성에 비해 크게는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지만, 같은 출생연도에 태어난 미혼남성의 경활율 수준에 비해서는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생연도별 경활율 추이 역시 기혼여성의 경활율 추이와는 달랐다. 특히 20대 기혼여성의 추이가 최근 출생연생일수록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20대 미혼여성의 추이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대 초반 미혼여성 사이에서 감소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20대 초반 여성의 대학진학률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활율 추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20~30대 기혼여성경활율이 다른 연령대의 기혼여성경활율에 비해, 또 같은 연령대의 미혼여성경활율에 비해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모든 고용취약계층을 통틀어 가장 낮은 경활율을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체 여성경활율 추이에서 경력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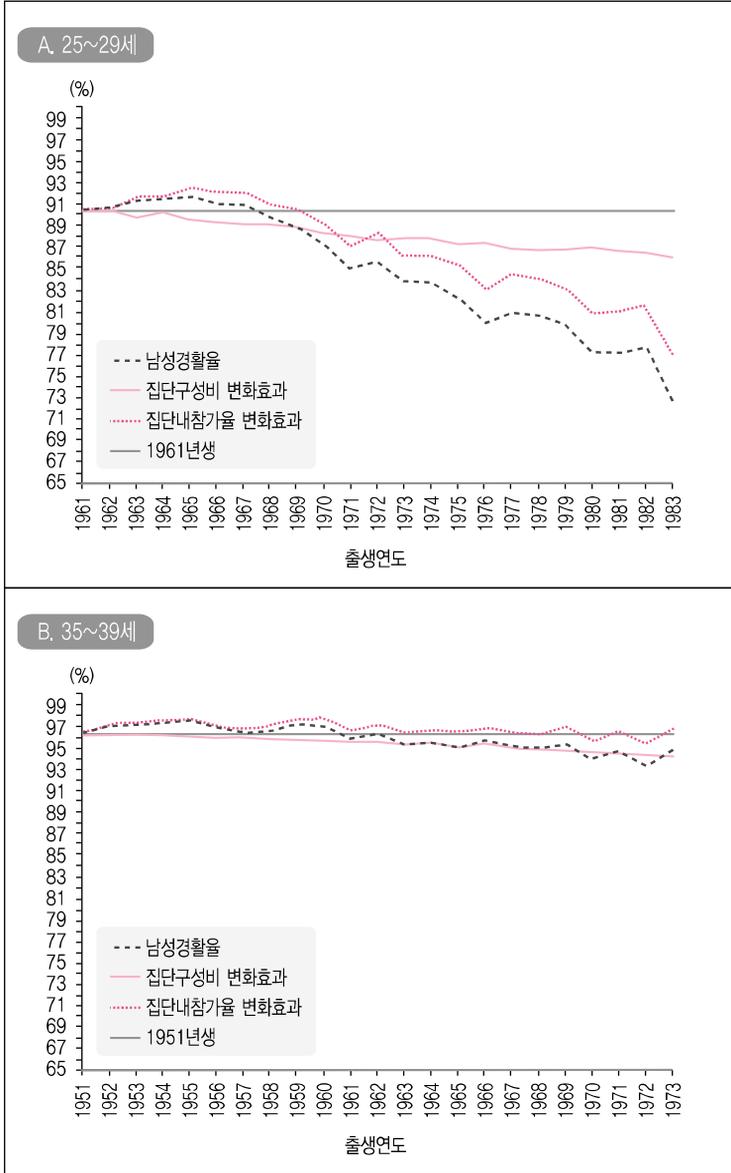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30대 연령집단의 기혼여성경황율이 정체 혹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의 연령이 3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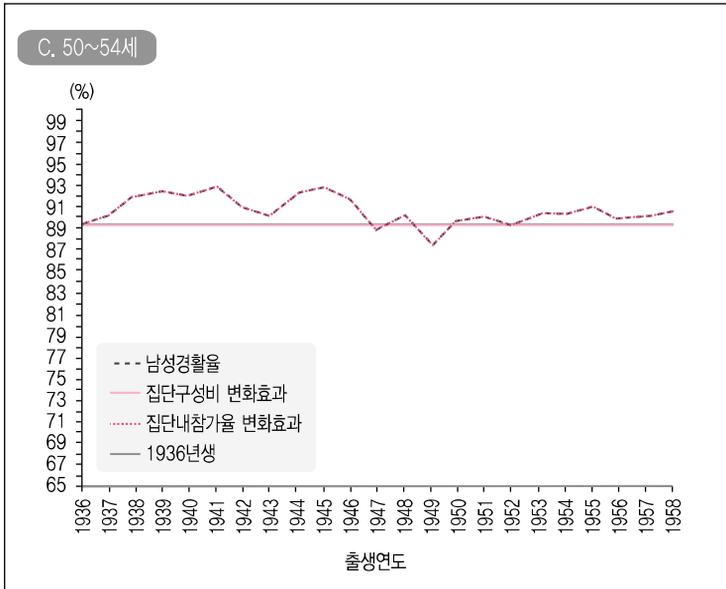
혼인상태의 변화 추이가 경황율 변화 추이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14>, <그림 15>와 <표 9>, <표 10>에 제시된 혼인상태를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14>는 남성경황율을 혼인상태를 이용해 요인분해한 결과이고 <표 9>에서 특정 출생연도의 측정값을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하게 <그림 15>는 여성경황율을 혼인상태를 이용해 요인분해한 결과이고 <표 10>에서 특정 출생연도의 측정값을 찾아볼 수 있다. 정의상 검은색 실선으로 표시된 실제 경황율과 회색 실선으로 표시된 기준 출생연도의 경황율은 <그림 8>과 <그림 9>에서 있는 실선들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먼저 25~29세 남성경황율의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14A>를 살펴보면,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모두 실제 경황율 추이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변화효과의 부호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경황율 차이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항상 같은 부호를 띄었으나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경황율 변화의 방향과 상관없이 항상 음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가 경황율 변화의 방향을 더 잘 예상했다. 또한 기준 출생연도인 1961년생의 경황율과 1970년 이후 출생집단 사이의 경황율 간의 차이를 요인분해한 결과는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요인분해 결과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25~29세 남성의 경황을 변화는 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없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 9>의 (1)열과 (2)열을 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 사이의 경황을 차이는  $-5.36\%p$ 였는데 이 중  $-2.17\%p$ 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였고,  $-3.19\%p$ 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였다. 즉, 두 출생연생 사이의 경황을 변화 중 약  $40.4\%(=2.17/5.36)$ 를 두 출생연생 사이의 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 가능하였고 나머지  $59.6\%$ 는 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이 불가능했다. 1961년생과 1981년생 남성이 각각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의 경황을 차이인  $-13.21\%p$ 에서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0\%(=3.83/13.21)$ 로 최근 출생연생일수록 경황을 추이 변화에 있어 혼인상태의 설명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남성 경제활동참가의 요인분해 혼인상태별 분해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표 9>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혼인상태별 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5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36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71년생 (1)	1981년생 (2)	1961년생 (3)	1971년생 (4)	1946년생 (5)	1956년생 (6)
경황율 차이	-5.36	-13.21	-0.26	-1.56	2.48	0.66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2.17	-3.83	-0.64	-1.81	-0.01	-0.02
기혼	-16.49	-29.06	-6.05	-17.10	-0.72	-2.00
미혼	14.31	25.23	5.41	15.28	0.72	1.99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3.19	-9.38	0.38	0.25	2.48	0.68
기혼	-0.23	-0.34	0.36	0.51	2.74	1.52
미혼	-2.96	-9.04	0.03	-0.26	-0.26	-0.85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 제시된 숫자의 단위는 모두 %p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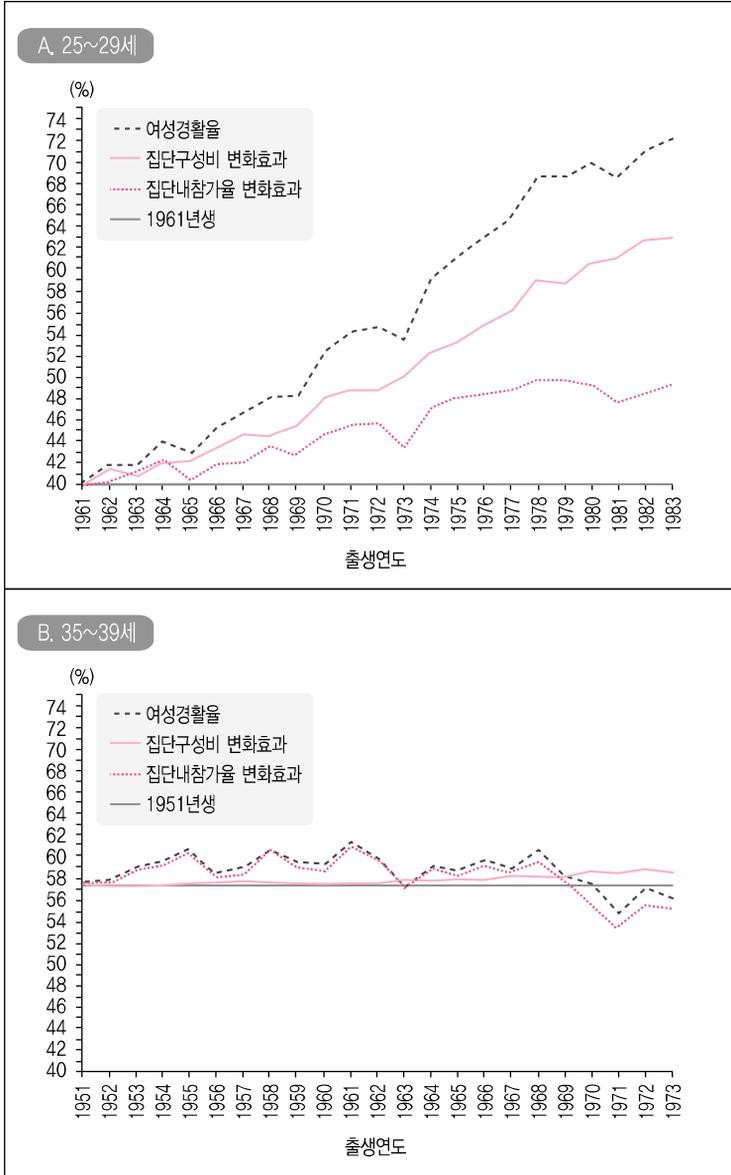
30대 후반 연령대 남성경활율의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14B>를 보면,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기준 출생연생의 경활율인 96%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의 추이가 하락세를 보이는 실제 경활율 추이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20대 후반 연령대의 요인분해 결과와 대조를 이룬다. <그림 12>에서 살펴보았듯이 30대 후반 연령집단에서는 미혼남성과 기혼남성 모두 출생연도별 경활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의 추이가 기준 출생연생의 경활율 추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그림 10>에서 보듯 35~39세 연령집단에서 기혼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5~29세 연령집단만큼은 아니지만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최근 출생연도일수록 하락세를 보여 음의 값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30대 후반 연령집단의 경활율 추이 변화의 상당부분을 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 가능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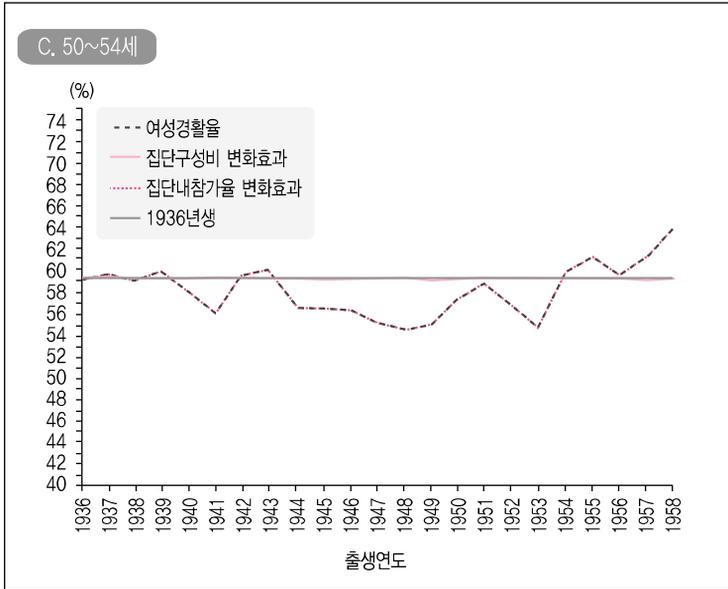
50~54세 남성경활율을 혼인상태를 이용하여 요인분해한 결과는 <그림 14B>에서 살펴본 30대 후반 남성 경활율의 결과와 완벽한 대비를 이룬다. <그림 14C>를 보면,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기준 출생연생의 경활율인 89%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의 추이가 실제 경활율 추이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혼인상태의 변화로 50대 초반의 남성경활율 변화를 거의 설명할 수 없었다. 우선 50대 후반 연령집단에서 기혼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거의 1에 가까운 값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구성비효과는 거의 0

에 가까웠다. 또,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기혼자내참가율 변화분과 거의 일치하였는데 이는 미혼남성의 비율을 가중치로 하는 미혼자내참가율 변화효과가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성생활율의 변화를 혼인상태를 이용하여 요인분해한 결과인 <그림 15>를 살펴보면, 50~54세 연령집단의 생활을 변화분의 대부분이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동일 연령집단의 남성생활율 요인분해 결과와 같지만, 25~29세와 35~39세 연령집단의 요인분해는 동일연령대의 남성생활율 변화의 요인분해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20대 후반 여성 결과인 <그림 15A>를 보면, 동일연령대 남성 결과에 비해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실제 생활을 추이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림 11>에서 나타난 20대 후반 연령대 기혼율의 급감 추이와 <그림 13>에서 나타난 미혼여성이 기혼여성에 비해 높은 생활율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그림 1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혼인상태별 분해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표 10>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혼인상태별 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5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36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71년생	1981년생	1961년생	1971년생	1946년생	1956년생
	(1)	(2)	(3)	(4)	(5)	(6)
경황을 차이	14.06	28.45	4.07	-2.65	-2.98	0.35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8.62	20.93	0.20	1.11	-0.02	-0.07
기혼	-6.37	-15.47	-0.67	-3.71	-0.09	-0.30
미혼	14.99	36.40	0.87	4.82	0.07	0.23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5.44	7.52	3.72	-3.81	-2.96	0.42
기혼	2.61	4.14	3.52	-4.19	-3.13	0.36
미혼	2.83	3.38	0.20	0.38	0.18	0.0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 제시된 숫자의 단위는 모두 %p임.

실제 경활율은 최근 출생연도일수록 크게 증가하였는데, 집단내참가를 변화효과가 1972년생 이후 감소 혹은 정체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의 증가 추세, 특히 미혼자구성비 변화효과가 실제 경활율 증가 추세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0>의 (1)열과 (2)열을 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 사이의 20대 후반 경활율 차이인 14.06%p 중, 8.62%p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였고 5.44%p가 집단내참가를 변화효과였다. 즉, 두 출생연생 사이의 경활율 변화 중 약 61.3%(=8.62/14.06)를 두 출생연생 사이의 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 가능하였고 나머지 38.7%는 혼인상태의 변화 이외의 요인으로 설명 가능했다. 1961년생 여성과 20년 후에 태어난 1981년생 여성의 20대 후반 경활율 차이는 약 28.45%p였는데, 이 중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에서 기인한 변화분은 약 73.6%(=20.93/28.45)로 최근 출생집단일수록 경활율 추이 변화에 있어 혼인상태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확인할 수 있다.

30대 후반 연령대의 여성경활율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15B>를 보면, 실제 경활율 추이가 집단내참가를 변화효과 추이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같은 연령대 남성경활율의 요인분해 결과 및 20대 후반 여성경활율의 요인분해 결과와 대조를 이룬다. 이 결과는 혼인상태의 변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30대 후반 여성 경활율이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의 (3)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1년생과 1961년생 사이의 30대 후반 경활율 차이인 4.07%p 중, 0.20%p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였고 3.72%p가 집단내참가를 변화효과였다. 두 출생연생의 경활율

변화의 약 4.9%(=0.20/4.07)만이 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되는 변화분인 것이다. 게다가 혼인상태 변화의 설명력은 최근 출생연도로 갈수록 감소한다. 예를 들어 <표 10>의 (4)열을 보면 1951년생과 1971년생 사이의 경황을 차이는 음의 부호를 띠는 반면에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양의 부호를 띠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경황을 변화의 방향마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로 양의 미혼자구성비 변화효과가 컸고 이에 따라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도 양의 값을 가졌지만, 기혼여성의 경황이 최근 출생연도로 갈수록 하락하였기 때문에 기혼자내참가율 변화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음의 값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50~54세 여성경황을 혼인상태를 이용하여 요인분해한 결과는 <그림 14C>에서 살펴본 동일연령대 남성경황의 결과와 거의 같다. <그림 15C>를 보면,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기준 출생연생의 경황율인 59% 수준과 거의 일치하는 수평적 패턴을 보였고,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의 추이가 실제경황을 추이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혼인상태의 변화로 50대 초반의 남성경황을 변화뿐만 아니라 50대 초반 여성경황의 변화도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50대 후반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 연령대에서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인구구성비율이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1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50~54세 여성의 거의 대부분이 기혼자이기 때문에 50대 초반 여성의 경황을 변화는 기혼자내참가율 변화효과인 50대 초반 기혼여성의 경황율과 거의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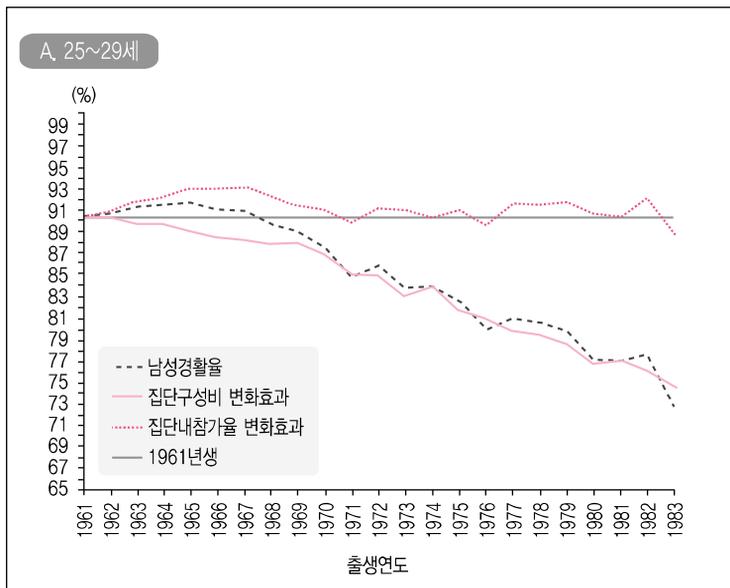
#### 4.4.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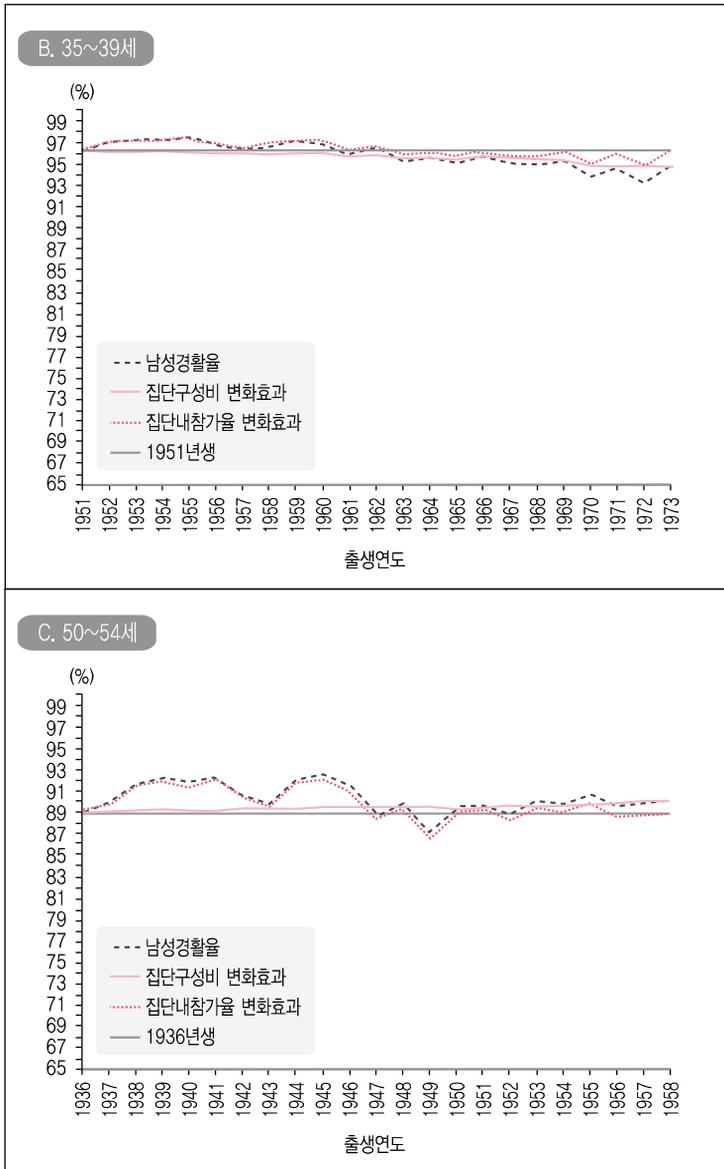
3.2절과 3.3절에서는 경활율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사회경제학적 요인인 학력과 혼인상태가 각각 경활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학력을 이용한 경활율 요인분해에서는 3개의 학력집단을 성, 출생연도, 연령을 이용해 세분화하였고, 혼인상태를 이용한 경활율 요인분해에서는 2개의 혼인상태별 집단을 역시 성, 출생연도, 연령을 이용하여 세분화하였다. 본 절에서는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고려하여 6개의 학력-혼인상태 집단(즉, 고졸 이하 학력의 기혼자, 초대졸 학력의 기혼자, 대졸 이상 학력의 기혼자, 고졸 이하 학력의 미혼자, 초대졸 학력의 미혼자, 대졸 이상 학력의 미혼자)으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성, 출생연도, 연령을 이용하여 세분화한 소집단의 경활율 추이를 분석한다.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요인분해 결과는 각 학력집단 내에서 미혼자와 기혼자의 효과를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사회경제학적 변수인 학력, 혼인상태, 경활율의 상관관계를 좀 더 면밀히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의 <그림 16>과 <그림 17>은 각각 남성과 여성경활율을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이용하여 요인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11>와 <표 12>에서 특정 출생연생의 측정값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20대 후반 남성경활율 결과인 <그림 16A>를 살

펴보면, 실제 경황을 추이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의 추이가 매우 비슷하고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기준 출생연생의 경황율인 90%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학력-혼인상태의 변화가 20대 후반 남성경황율 변화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혼인상태가 동시에 갖는 설명력은 학력과 혼인상태를 따로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에서 학력과 혼인상태 각각이 가진 설명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표 11>의 (1) 열을 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 경황율 차이인 -5.36%p 중, -5.10%p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이고, -0.26%p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였다.

<그림 16>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분해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lt;표 11&gt;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학력, 혼인상태를 이용한 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5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36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71년생	1981년생	1961년생	1971년생	1946년생	1956년생
	(1)	(2)	(3)	(4)	(5)	(6)
경황을 차이	-5.36	-13.21	-0.26	-1.56	2.48	0.66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5.10	-13.27	-0.41	-1.30	0.57	0.95
고졸기혼자	-13.77	-25.49	-22.35	-43.88	-6.83	-12.67
초대졸기혼자	-0.83	1.12	5.56	9.03	0.25	1.48
대졸기혼자	-1.96	-4.97	10.99	18.19	6.44	10.13
고졸미혼자	-0.26	-13.55	4.58	7.88	0.57	1.52
초대졸미혼자	5.23	14.36	0.26	3.11	0.06	0.21
대졸미혼자	6.50	15.25	0.55	4.37	0.09	0.28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0.26	0.06	0.15	-0.26	1.90	-0.29
고졸기혼자	-0.25	-0.18	0.56	0.09	2.24	1.16
초대졸기혼자	0.13	0.26	0.07	0.35	-0.05	0.04
대졸기혼자	-0.04	-0.15	-0.53	-0.37	-0.02	-0.61
고졸미혼자	-1.39	-1.75	0.08	-0.19	-0.15	-0.69
초대졸미혼자	1.85	4.52	-0.06	-0.46	-0.07	-0.17
대졸미혼자	-0.56	-2.65	0.02	0.32	-0.04	-0.0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 제시된 숫자의 단위는 모두 %p임.

즉, 두 출생연생 경황을 차이의 약 95.1%(=5.10/5.36)를 학력-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 가능하였다. 특히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중 고졸기혼자와 대졸미혼자 구성비 변화효과의 (절대)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두 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변화가 20대 후반 남성경황을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표의 (2)열을 살펴보면 1961년생과 1981년생 간의 경황을 차이는 -13.21%p였는데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13.27%p로 학력-혼인상태별 집단구성비율의 변화가 실제 경황을 변화에 매우 근접

한 측정값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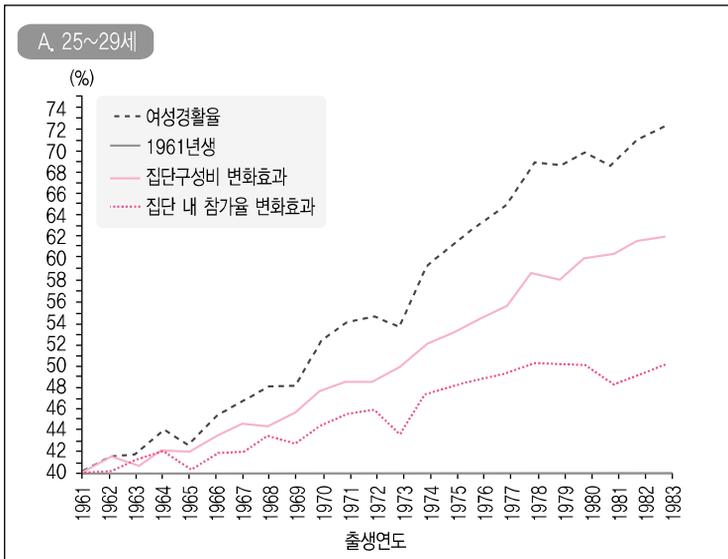
35~39세 연령집단의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16B>는 실제 경  
 활을 추이,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1951  
 년생 경활율이 모두 96%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그림 8B>과 <그림 14B>에서 집단구성  
 비 변화효과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의 (절대)크기가 작았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 즉 30대 후반 남성의 경활율이 학력별, 혼  
 인상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출생연도에 따른 변화 없  
 이 정체추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각 집단별 경활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각 소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서로를 상쇄하고, 출  
 생연도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크  
 기 또한 작은 것이다. 실제 경활을 추이는 1963년생까지는 집단  
 내참가율 변화효과와 비슷하지만 그 이후 출생집단부터는 집단  
 구성비 변화효과와 비슷하여 최근 출생연생일수록 학력-혼인상  
 태 변화의 경활을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 <표 11>  
 의 (3)열을 보면, 1951년생과 1961년생 남성의 30대 후반 경활  
 율 차이는 총  $-0.26\%$ 였는데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0.41\%$   
 로 경활을 변화를 과잉예측하였다. 그러나 같은 표의 (4)열을  
 보면 1951년생과 1971년생 남성의 30대 경활율 차이인  $-1.56\%$   
 중  $83.3\%(=1.30/1.56)$ 를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즉, 학력-혼인상태  
 의 변화로 설명 가능하였다. 특히 고졸기혼자와 대졸기혼자 구  
 성비 변화효과의 (절대)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두 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변화가 30대 후반 남성경활을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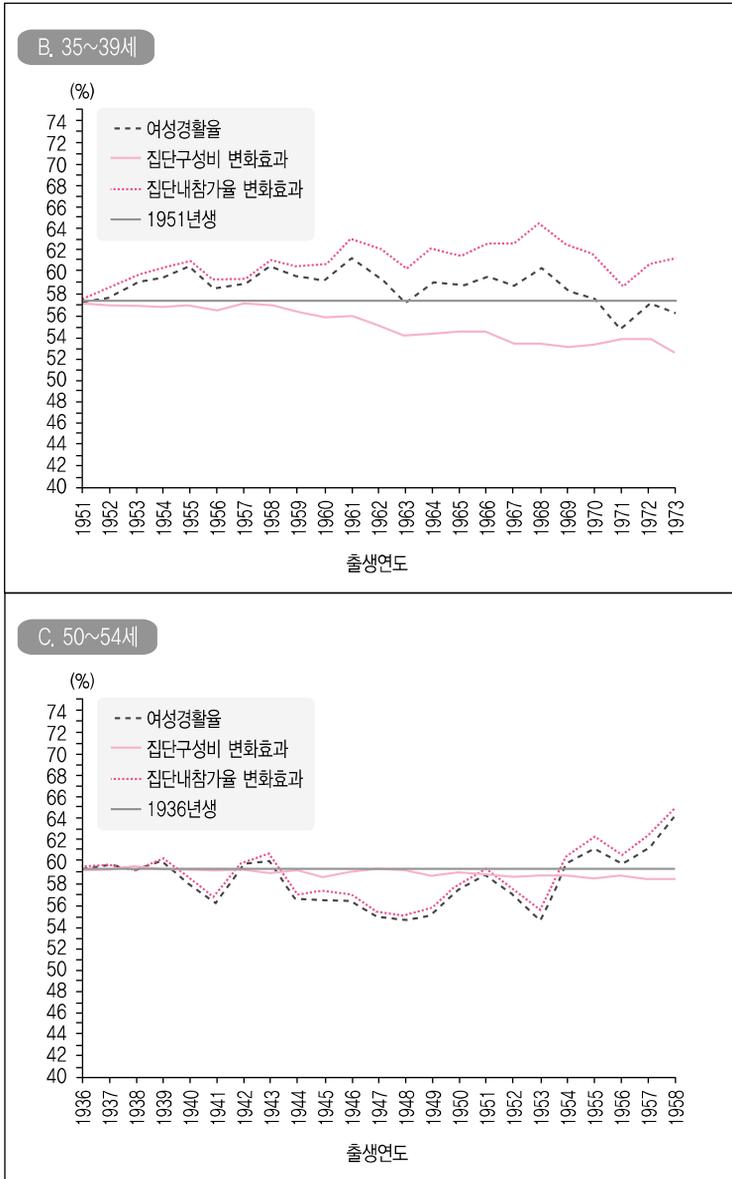
50대 후반 남성경황을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이용하여 요인분해한 결과는 <그림 16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남성 경황을 추이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력과 혼인상태를 각각 이용한 요인 분해 결과인 <그림 8C>와 <그림 14C>와 다르지 않다.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1946년생 혹은 이전 출생연생의 경황을 변화를 과소예측하고 그 이후 출생연생의 경황을 변화를 과잉예측 하는데, 그 추이가 실제 경황을 추이와는 큰 관련없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학력-혼인상태의 변화가 50대 후반 남성 경황을 변화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0대 후반 남성 중 고졸기혼자가 차지하는 인구구성비율이 압도적이므로 고졸기혼자 구성비 변화효과와 고졸기혼자 내 참가율 변화효과의 절대 크기가 가장 컸다.

이제 여성경황을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17>과 <표 12>을 살펴보자. 우선 20대 후반 여성경황을 결과인 <그림 17A>를 살펴보면, 혼인상태만을 이용하여 요인분해 한 결과인 <그림 15A>와 매우 비슷하다. 즉, 실제 경황을 추이와 학력-혼인상태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의 추이와 비슷하여 학력-혼인상태의 변화가 20대 후반 여성경황을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경황을 요인분해 결과와는 달리, 학력-혼인상태가 동시에 갖는 설명력은 학력과 혼인상태를 따로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에서 학력과 혼인상태 각각이 가진 설명력보다 작았다. 예를 들어 <표 12>의 (1)열을 보면, 1961년생과 1971년생 경황을 차이인 14.06%p 중, 8.56%p가 집단구성비 변

화효과이고, 5.50%p가 집단내참가를 변화효과였다. 즉, 두 출생 연생 경향을 차이의 약 60.9%(=8.56/14.06)를 학력-혼인상태의 변화로 설명 가능하였는데 이는 혼인상태가 갖는 단독설명력인 61.3%보다 작다. 같은 표의 (2)열을 살펴보면 1961년생과 1981년생 경향을 차이는 28.45%p였는데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20.18%p로 학력-혼인상태의 변화가 실제 경향을 변화의 70.9%(=20.18/28.45)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혼인상태가 갖는 단독설명력인 73.6%보다 작다.

<그림 17>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요인분해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분해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표 12>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요인분해 학력, 혼인상태를 이용한 분해

	25~29세		35~39세		50~54세	
	196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51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36년생과 다음 년생 간의 변화	
	1971년생	1981년생	1961년생	1971년생	1946년생	1956년생
	(1)	(2)	(3)	(4)	(5)	(6)
경향을 차이	14.06	28.45	4.07	-2.65	-2.98	0.35
집단구성비 변화효과	8.56	20.18	-1.54	-3.63	-0.42	-0.71
고졸기혼자	-9.58	-19.13	-6.52	-23.29	-2.96	-5.84
초대졸기혼자	1.89	3.54	2.44	8.73	0.78	1.41
대졸기혼자	1.57	0.49	1.78	5.68	1.79	3.53
고졸미혼자	3.50	0.02	0.42	1.26	-0.04	0.15
초대졸미혼자	5.16	16.31	0.15	0.50	0.00	0.03
대졸미혼자	6.02	18.94	0.19	3.47	0.00	0.00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5.50	8.27	5.61	0.99	-2.56	1.07
고졸기혼자	0.34	0.21	3.44	-2.02	-2.59	0.94
초대졸기혼자	0.11	1.98	-0.71	-2.24	0.02	0.01
대졸기혼자	1.91	1.57	2.42	5.24	-0.26	0.01
고졸미혼자	0.78	0.28	0.33	0.04	0.05	0.05
초대졸미혼자	1.15	2.89	0.18	0.35	0.00	0.00
대졸미혼자	1.21	1.34	-0.05	-0.38	0.23	0.06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주: 표에 제시된 숫자의 단위는 모두 %p임.

35~39세 연령집단의 요인분해 결과인 <그림 17B>는 학력만을 이용하여 요인분해한 결과인 <그림 9B>와 매우 비슷하다. 혼인상태만을 이용한 요인분해 결과에서 집단구성비 변화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이용한 요인분해결과가 학력만을 이용한 결과와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는

항상 양의 부호를 띠었고 최근 출생연도일수록 크기가 커져 실제 경황을 추이를 과잉예측한다. 반면에,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항상 음의 부호를 띠었고 최근 출생연도일수록 역시 크기가 커져 실제 경황을 추이를 과소예측한다. <표 12>의 (3)열과 (4)열을 보면,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에서 고졸기혼자와 대졸기혼자 효과의 (절대)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두 소집단이 30대 후반 여성경황을 추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17C>는 50대 후반 여성경황을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이용하여 요인분해한 결과인데, 남성경황의 결과인 <그림 16C>, 학력만을 이용한 여성 경황을 결과인 <그림 9C>, 혼인상태만을 이용한 여성 경황을 결과인 <그림 15C>와 같은 결과, 즉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 추이가 실제 경황을 추이와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 여성경황을 변화의 대부분이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실은 학력-혼인상태가 50대 후반 여성경황을 변화를 거의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학력과 혼인상태로 분류한 인구구성의 비율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거의 변함이 없었고 50대 초반 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졸기혼자 여성의 경황이 출생연도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표 12>의 (5)열과 (6)열을 보면, 집단구성비 변화효과와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에서 고졸기혼자 효과의 (절대)크기가 가장 컸다.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제 V 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경황을 요인분해 결과를 바탕으로 한 <표 13>-<표 15>를 통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한 뒤 결론을 맺는다. 다음의 <표 13>, <표 14>, <표 15>은 각각 청년층, 출산·육아기 여성 및 같은 연령대의 남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황을 변화를 요인분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표 13>-<표 15>의 요인분해 결과는 출생연도를 10년 단위로 묶은 후, 193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까지 각각에 해당하는 10년치 변화를 누적한 효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sup>13)</sup> <표 7>-<표 12>에서 본 측정값들과 다르다.<sup>14)</sup> 누적된 경황을 변화와 집단구성비 변화효과를 이용하여 학력, 혼인상태, 학력-혼인상태의 설명력을 %단위로 제시하였다. 설명력이 음의 부호를 가지면 해당 변수가 실제 경황을 변화 추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예측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표 15>는 각각 세 개의 패널을 포함하고 있는데 패널 C, B, A의 순서로 2012년 현재와 가장 가까운 연도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패널 A와 패널 B를 통해 과거의 추이를 살펴보고, 패널 C에 나온 측정값을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13) 데이터 관계상 1930년대생은 1936~1939년생의 누적효과, 1950년대생은 1950~1958년생의 누적효과, 1960년대생은 1961~1969년생의 누적효과, 1980년대생은 1980~1983년생의 누적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14) 설명력의 측정값은 0%보다 작은 값과 100%보다 큰 값도 제시되어있다. 설명력이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경우는 집단구성비변화효과가 실제 경황을 변화와 반대방향으로 측정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정략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설명력이 100%보다 큰 경우는 집단구성비변화효과가 실제 경황을 변화를 과대예측하였다는 의미로, 이 경우 역시 정략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

## 5.1. 청년층에 대한 시사점

2장에서 소개하였듯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인턴 신청 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의 인턴 지원 대상자를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및 제조업종 대기업이 인턴으로 채용하면 정부에서 해당 사업장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경력 형성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의 채용난 문제도 해결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림 2>와 <그림 3>, <그림 6>에서 살펴보았듯이 15~34세 남성경황율은 모든 학력집단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5~24세 여성경황율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 취업인턴제의 정책 대상은 적절하며, 제도를 통해 청년층에게는 노동시장 참여의 인센티브, 중소기업에게는 이들을 고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남녀 청년층의 경황율과 고용률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된다.

**<표 13> 25~29세 남녀의 경황율 변화 요인분해 결과 요약**

	남 (1)	녀 (2)
A. 1961~1969년생 사이의 누적		
경황율 변화(가, %p)	3.10	38.69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나, %p)	-7.18	7.79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다, %p)	-6.22	24.08
학력·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라, %p)	-11.84	24.38
학력의 설명력(나/가, %)	-232	20
혼인상태의 설명력(다/가, %)	-201	62
학력·혼인상태의 설명력(라/가, %)	-382	63

〈표 13〉 계속

	남 (1)	녀 (2)
B. 1970~1979년생 사이의 누적		
경활을 변화(가, %p)	-74.12	199.04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나, %p)	-50.15	38.29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다, %p)	-27.98	128.53
학력-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라, %p)	-79.42	125.83
<b>학력의 설명력(나/가, %)</b>	<b>68</b>	<b>19</b>
<b>혼인상태의 설명력(다/가, %)</b>	<b>38</b>	<b>65</b>
<b>학력-혼인상태의 설명력(라/가, %)</b>	<b>107</b>	<b>63</b>
C. 1980~1983년생 사이의 누적		
경활을 변화(가, %p)	-56.58	120.60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나, %p)	-37.81	24.86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다, %p)	-15.53	86.42
학력-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라, %p)	-57.10	83.25
<b>학력의 설명력(나/가, %)</b>	<b>67</b>	<b>21</b>
<b>혼인상태의 설명력(다/가, %)</b>	<b>27</b>	<b>72</b>
<b>학력-혼인상태의 설명력(라/가, %)</b>	<b>101</b>	<b>69</b>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한편, 능력 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방안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을 능력 중심으로 바꾸어 청년층의 과잉학력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들의 경활을 및 고용률을 제고하려는 장기 정책이다.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그림 4A〉와 〈그림 5A〉에서 살펴 보았듯이 최근 4년간 20%와 24%를 기록했던 25~29세 남성과 여성 중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sup>15)</sup> 과잉학력 문제 해소를 인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표 13〉 패널 C의 (1)열과 (2)열에 나와 있듯이, 장기적으로 학력구성비를 변화시키는 정책은 남성경활을 변화에 67%, 여성경활을 변화에 21%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

15) 2008~2012년 25~29세 남녀 중 고졸 이하 학력자의 평균비율을 계산한 수치이다.

문에 정책 효과는 정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성에게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취업인턴제의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제조업종 대기업의 인턴 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활율과 고용률 제고에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제조업종 대기업 종사자와 희망종사자가 대부분 남성이므로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동일학력의 남성이 인턴 지원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능력 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방안 역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경활율과 고용률 제고에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 예상되어, 여성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보완되어야만 더욱 큰 여성경활율과 여성고용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5.2. 출산·육아기 여성에 대한 시사점

〈그림 3〉과 〈그림 13〉에서 살펴보았듯이 30대 기혼여성은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이들이 모든 고용취약계층을 통틀어 가장 낮은 경활율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대 후반-30대의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활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표 14〉 패널 C의 (2)열을 보면, 집단내참가율 변화효과는  $-8.95\%p(=-3.99-4.96)$ 로 실제 여성경활율 변화와 방향이 같았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경활율이 최근 들어 더욱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활율과 고용률을 제고시키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의 성패에 여성경활율과 고용률 제고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도 출산·육아기 여성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내놓은 여성경활율 및 고용률 제고 방안이다. 그간의 정부 정책에 비해 강도 높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골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 육아휴직 사용 촉진, (2) 보육·돌봄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3) 재취업과 시간선택제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한결같이 여성 고용의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들에게 오히려 여성을 고용하지 않을 인센티

브를 제공한다. 즉, 정부의 여성우호적인 고용정책이 효과를 거두어 많은 비경제활동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고용비용이 큰 여성을 고용하지 않아 여성고용률이 아닌 여성실업률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성경황을 제고 정책을 여성고용률 제고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기업에게 여성 고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35~39세 남녀의 경황을 변화 요인분해 결과 요약

	남 (1)	녀 (2)
<b>A. 1951~1959년생 사이의 누적</b>		
경황을 변화(가, %p)	5.75	15.08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나, %p)	0.48	-4.74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다, %p)	-1.92	0.94
학력·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라, %p)	-1.47	-5.16
<b>학력의 설명력(나/가, %)</b>	<b>8</b>	<b>-31</b>
<b>혼인상태의 설명력(다/가, %)</b>	<b>-33</b>	<b>6</b>
<b>학력·혼인상태의 설명력(라/가, %)</b>	<b>-26</b>	<b>-34</b>
<b>B. 1960~1969년생 사이의 누적</b>		
경황을 변화(가, %p)	-6.16	18.49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나, %p)	3.88	-30.93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다, %p)	-10.05	4.62
학력·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라, %p)	-6.02	-29.52
<b>학력의 설명력(나/가, %)</b>	<b>-63</b>	<b>-167</b>
<b>혼인상태의 설명력(다/가, %)</b>	<b>163</b>	<b>25</b>
<b>학력·혼인상태의 설명력(라/가, %)</b>	<b>98</b>	<b>-160</b>
<b>C. 1970~1973년생 사이의 누적</b>		
경황을 변화(가, %p)	-8.40	-3.99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나, %p)	2.17	-21.54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다, %p)	-7.70	4.96
학력·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라, %p)	-5.62	-16.33
<b>학력의 설명력(나/가, %)</b>	<b>-26</b>	<b>539</b>
<b>혼인상태의 설명력(다/가, %)</b>	<b>92</b>	<b>-124</b>
<b>학력·혼인상태의 설명력(라/가, %)</b>	<b>67</b>	<b>409</b>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 5.3. 베이비부머 세대 등 장년층에 대한 시사점

〈표 15〉에서 보듯이 학력과 혼인상태의 변화로 50~54세 남녀 경활율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는 장년층의 경활율 추이와 학력,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이 출생연도에 따른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50대 초반 남성의 최근 경활율은 학력과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50대 초반 여성의 최근 경활율은 학력과 상관없이 55% 정도의 수준을 보였고, 혼인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장년층 남성에게는 경활율 제고 정책보단 고용률 제고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고 장년층 여성에게는 경활율 및 고용률 제고 정책이 모두 필요한 실정이다. 장년층의 고용률 제고 정책은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등 지원 정책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장년층의 경활율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은 장년취업인턴제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장년취업인턴제는 실시기업에 대해 인턴기간 4개월과 정규직 채용 시 추가 6개월, 즉 총 10개월간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적 효과를 거두리라 예상하기 어렵다.

&lt;표 15&gt; 50~54세 남녀의 경황을 변화 요인분해 결과 요약

	남 (1)	녀 (2)
A. 1936~1939년생 사이의 누적		
경황을 변화(가, %p)	6.77	0.63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나, %p)	0.57	-0.14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다, %p)	0.00	0.04
학력-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라, %p)	6.21	0.75
<b>학력의 설명력(나가, %)</b>	<b>8</b>	<b>-22</b>
<b>혼인상태의 설명력(다가, %)</b>	<b>0</b>	<b>6</b>
<b>학력-혼인상태의 설명력(라가, %)</b>	<b>92</b>	<b>120</b>
B. 1940~1949년생 사이의 누적		
경황을 변화(가, %p)	16.54	-25.14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나, %p)	3.80	-2.64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다, %p)	-0.04	-0.32
학력-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라, %p)	12.79	-21.59
<b>학력의 설명력(나가, %)</b>	<b>23</b>	<b>11</b>
<b>혼인상태의 설명력(다가, %)</b>	<b>0</b>	<b>1</b>
<b>학력-혼인상태의 설명력(라가, %)</b>	<b>77</b>	<b>86</b>
C. 1950~1958년생 사이의 누적		
경황을 변화(가, %p)	7.22	-0.80
학력집단구성비 변화효과(나, %p)	6.53	-4.32
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다, %p)	-0.13	-1.15
학력-혼인상태별집단구성비 변화효과(라, %p)	0.83	5.80
<b>학력의 설명력(나가, %)</b>	<b>90</b>	<b>541</b>
<b>혼인상태의 설명력(다가, %)</b>	<b>-2</b>	<b>145</b>
<b>학력-혼인상태의 설명력(라가, %)</b>	<b>11</b>	<b>-727</b>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986~2012

여성 장년층과 가장 관련 있는 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중 재취업 확대 방안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이 있는데, 재취업 확대 방안은 고학력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턴십 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장년층 여성 중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장년층 여성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장년층 여성의 경우 학력에 따른 경황율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

문에 장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학력자 위주의 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자칫 저학력 장년층 여성이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 또한 장년층 여성보다는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청년층 및 중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장년층 여성의 경활을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시급한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5.4. 결론

본 연구는 경황을 추이, 학력과 혼인상태 따른 인구구성비율의 추이, 학력집단 내 경황을 추이, 혼인상태별 집단 내의 경황을 추이를 성별·연령별·출생연도별로 살펴봄으로써 경황을 추이가 학력 및 혼인상태의 변화와 갖는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경황을 변화를 학력과 혼인상태를 이용해 요인분해하여 학력 혹은 혼인상태의 변화가 경황을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력의 제고 및 결혼연령의 상승 등과 같은 현 추세가 경황을 변화 추이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고용취약계층의 경황을 추이를 학력과 혼인 상태 등으로 얼마나 설명 가능한지 분석하여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경황을 및 고용률 제고 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분석 결과, 학력과 혼인상태의 변화가 경황을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구집단은 25~29세 남녀였다. 특히 20대 후반 남녀의 경우 학력과 혼인상태의 설명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였다. 그러나 학력의 변화는 남성경황율의 변화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고졸 확대 정책 등 학력 관련 정책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0

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은 경활율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에게 여성 고용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0대 출산·육아기 여성이 모든 인구집단 중 가장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 경활율 제고 정책은 이들의 경활율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장년층 여성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년층 여성은 학력별 경활율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학력자를 위한 리턴십 제도는 장년층 저학력 여성을 정책적으로 차별할 우려가 있다. 장년층 여성의 경활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월간 노동리뷰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 금재호·윤자영,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정책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1.
- 김안국·임 언·최지희·유한구·김기현,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 김광석, 『고학력자의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 이슈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13.
- 김주섭,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분석』, 노동정책연구 5(2), 제5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배기준, 『경제활동참가를 변화의 분해-인구구성 변화를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3.
- 한국고용정보원, 『최근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에 대한 만족도』, 고용이슈 9월호, 한국고용정보원, 2013.
- Fallick·Pingle, 『A Cohort-Based Model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Federal Reserve Board, Washington, D.C., 2009.
- Goldin,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6(2): 1-21, 2006.
- Hotchkiss, 『Changes in Behavioral and Characteristic Determination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1975-2005』 Economic Review

- Federal Reserve of Atlanta, 91(2): 1-20, 2006.
- Hotchkiss, 『Decomposing Changes in the Aggreg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Working Paper Series 2009-6,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2009.
- Kwon, 『Change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Korea: 1980 - 2005』, 노동경제논집 31(2): 129-156, 한국노동연구원, 2008.
- Lee, 『The Plateau in U.S.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 Cohort Analysis』 Industrial Relations 53(1): 46-71, 2014.



##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 부록 - 고용취약계층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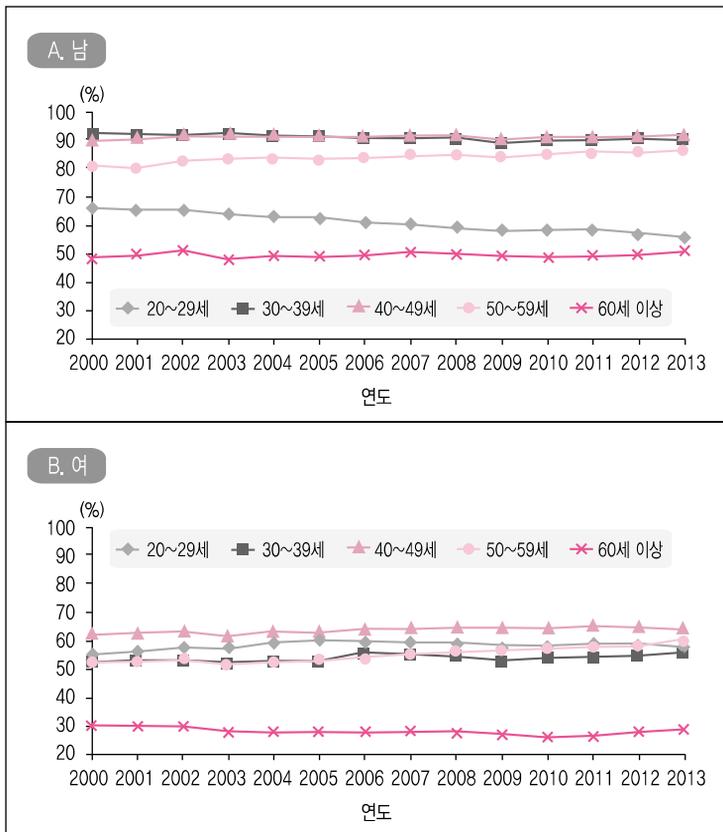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고용취약계층은 인구를 성·연령별 소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집단으로 정의 내리고, 구체적으로 20대 청년층, 출산·육아기 여성,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의 〈부록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록 그림〉은 한국의 2000~2013년 성·연령별 고용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남녀를 불문하고 60세 이상 장년층이 모든 연령집단 중 가장 낮은 고용률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60세 이상 남성은 50%대, 60세 이상 여성은 30%대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연령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고용률 차이가 현저하다. 특히 여성고용률이 남성고용률에 비해 매우 낮는데, 이는 남성 중 고용률이 두 번째로 낮은 집단인 20대 청년층의 고용률과 여성 중 고용률이 제일 높은 집단인 40대 여성의 고용률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부록 그림 A〉를 우선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다음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연령집단은 20대 청년층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연령집단은 50대 장년층이다. 이러한 연령별 추이는 최근 14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부록 그림 B〉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08년 이전과 이후에 연령별 추이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60세 장년층, 30대 출산·육아기 여성, 50대 장년층 순으로 고용률이 낮고, 20대 청년층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8년 이후에는 50대 장년층과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수준이 비슷해졌는데 이는 20대 청년

층의 고용률이 정체되어있는 것에 반해 50대 장년층의 고용률은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연령별 추이를 바탕으로 고용취약계층을 20대 청년층, 출산·육아기 여성, 50대 이상의 장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경황율과 학력, 혼인상태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부록 그림> 성·연령별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Abstract

### A Cohort Analysis on Korean Labor Force Participation from 1986 to 2012

Lee, Jin Young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LFP) rate in Korea has leveled off since 1991. There are three phenomena which are widely believed to be associated with the plateau in Korean LFP: a rise in educational attainment among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a low LFP rate among married women with young children, and babyboomers' early retirement. To see how the trends in the LFP rate,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tatus are inter-related, I investigate changes in LFP rates and the related socioeconomic outcomes of men and women by birth cohort using Economic Activity Survey data from 1986 to 2012. I also conduct a series of shift-share analyses that decompose changes in LFP into composition and within-group effects, with groups defined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tatus. I find that for men in their late twenties, changes in their LFP rate are mostly explained by changes in their educational attainment. For women in their late twenties, however, changes in their LFP rate are mostly explained by changes in their marital status. For men and women aged 30 or older, changes in their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tatus did not contribute much to changes in their LFP rate. These analyses imply that policies that impact educational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such as providing incentives to hire high school graduates rather than college graduates, may have more effects on men than women. To raise LFP rate and employment-population ratio as government intend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with more focus on women.

Keyword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status, Shift-share analysis, decomposition, within-group effect, composition effect.